





당진시 시군협력 과제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 제 출 문

당진시 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5

충남연구원장 윤 황



# 목 차

제 1장	연구개요	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04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05
제 2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 분석	07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률적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09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쟁점 검토	16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 검토	19
제 3장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51
	1. 당진시 일반 현황	53
	2.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59
제 4장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 실증분석	63
	1. 분석의 개요	65
	2.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분석	66
	3. 당진시 주거지와 축사 간 공간적 분포특성 실증분석	76
	4. 소결	92
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3
	1. 결론	95
	2. 정책제언 : 조례수정안	97
참고문헌		99
부 록	1. 동 · 리 단위 축종별 최소거리 및 건물 간 최소거리 분석결과	103
	2. 동 · 리 단위 및 축종별 축사 특성(동수/사육두수/축사면적) 집계	108
	3. 당진시 제한구역 현황	124
	4.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	125
	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12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7. 당진시 담당자 및 현장 면담	157

# 표 목 차

## 제 1장 연구개요

[표 1-1] 연구의 추진 체계	05
-------------------	----

## 제 2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 분석

[표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09
[표 2-2] 2011년 환경부 권고안	11
[표 2-3] 2015년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제시안	12
[표 2-4] 일본의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15
[표 2-5] 시도별 선정 시군 수	19
[표 2-6] 축종별 상위 사육두수 시군	20
[표 2-7] 조례의 명칭에 따른 분류	21
[표 2-8] 가축분뇨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2
[표 2-9]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당 이격거리에 의한 분류	23
[표 2-10]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당 이격거리 기준에 의한 분류	25
[표 2-11] 축종별 악취등급 설정 현황	26
[표 2-12] 환경부 제시 등급 및 최소 제한거리	26
[표 2-13] 소(말 포함) 제한거리	27
[표 2-14] 젖소 제한거리	28
[표 2-15] 돼지 제한거리	30
[표 2-16] 닭, 오리 제한거리	32
[표 2-17] 축종별 제한거리 종합	35
[표 2-18] 법령상 가축사육제한 지역	36
[표 2-19] 절대제한구역 설정에 활용된 법률 현황	38
[표 2-20] 기타 제시 현황	39
[표 2-21] 행정처분기준 비교	40
[표 2-22] 과징금 산정기준	44
[표 2-23] 가축사육시설의 증·개축	45

[표 2-24] 가축사육시설의 신축 및 이전	48
[표 2-25] 가축사육시설의 조정	49

### 제 3장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표 3-1] 충청남도 당진시 농가수, 농가인구 추이(5개년)	53
[표 3-2] 충청남도 당진시 논밭별 경지면적(2019년)	54
[표 3-3] 충청남도 당진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55
[표 3-4] 충청남도 당진시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56
[표 3-5] 당진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개요	57
[표 3-6] 당진시 축산물 위생 관계업소	58
[표 3-7] 당진시 축종에 따른 축사 현황(2018년)	59
[표 3-8] 당진시 가축 사육두수 현황(2018년)	60
[표 3-9] 당진시 축종별 축사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집계 결과	61
[표 3-10] 취합 축종별 재집계결과	62

### 제 4장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 실증분석

[표 4-1] 당진시 축종별 축사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집계 결과(18년 5월 기준)	69
[표 4-2] 취합 축종별 재집계결과(18년 5월 기준)	70
[표 4-3] 주거지 유형별 연면적 및 건물수	75
[표 4-4]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 증가에 따른 최소거리의 변화추이 : 표	88
[표 4-5]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 증가에 따른 최소거리의 변화추이 : 그래프	89
[표 4-6]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 증가에 따른 최소거리의 변화추이 : 종합	90
[표 4-7] 주거지 유형별 축종별 축사까지의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91
[표 4-8] 축종별 최소거리 요약 통계량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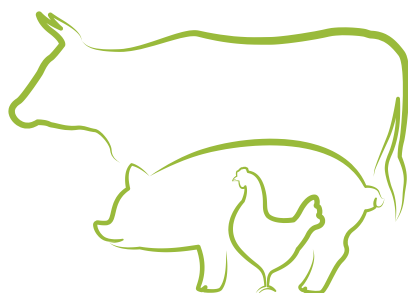
# 그림 목차

## 제 2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 분석

[그림 2-1] 가축사육 제한거리 및 주거밀집지역 평균	36
--------------------------------	----

## 제 4장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 실증분석

[그림 4-1]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원자료	66
[그림 4-2] 주거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간 DB 구축을 위한 자료원(data source)	67
[그림 4-3] 당진시 주거지 및 축사의 분포현황	68
[그림 4-4] 동·리 단위 총사육두수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71
[그림 4-5] 동·리 단위 축사 개수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72
[그림 4-6] 동·리 단위 축사면적( $m^2$ )합계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73
[그림 4-7]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개수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74
[그림 4-8]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단독주택/공동주택)의 연면적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75
[그림 4-9] 축사와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 기준 영향권의 개념	76
[그림 4-10] 주거용 건물로부터 축사까지의 최소거리의 공간적 분포 : 전체 축종	78
[그림 4-11] 주거용 건물로부터 축사까지의 최소거리의 공간적 분포 : 한우/육우/젖소	79
[그림 4-12] 주거용 건물로부터 축사까지의 최소거리의 공간적 분포 : 돼지/닭	80
[그림 4-13] 동·리 단위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 전체 축종	82
[그림 4-14] 동·리 단위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 한우/육우/젖소	83
[그림 4-15] 동·리 단위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 돼지/닭	84
[그림 4-16]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 집계결과	85
[그림 4-17] 동·리 단위 주거지 밀도와 축사 최소거리 중첩분석 결과	86



# 제1장

##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 제1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 현행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관련한 강한 규제

-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각 지역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진시에서도 이에 따라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음
-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2011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 연구에 의해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를 시행하는 등 제한구역 거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권고한 상황임
- 실제로는 당진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 보다 더 강한 규제로 마련되어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 ■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

- 기존의 축사가 노후화되어 현대화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신·개축 및 이전하려는 경우를 비롯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농림지역 토지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 더불어 현재의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하에서는 기존의 축사를 폐쇄하고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가능한 지역이 없는 상황으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 연구의 목적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완화 조항 설정 필요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당진의 축산업이 위축되고 위법축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지역주민의 삶이 질이 유지되면서 축산업이 공존하는 형태의 논의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거밀집지역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이유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조건의 완화가 필요 있음
- 더불어 신규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의 축산업 개시나 축산의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자원화를 위한 스마트축산단지 등 국가 조성 단지 및 축산 관련 연구 시설에서의 사양실험을 위한 사육의 경우 등 공공의 목적의 경우 등에는 완화될 필요가 있음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의 근거 자료

- 현행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연구의 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 분석
-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증분석
-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기준 제시

##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 시간적 범위<sup>1)</sup> : 2018.05.03.~2020.06.15.

## 제3절 연구의 추진 체계

■ 연구의 추진 체계

[표 1-1] 연구의 추진 체계

참여업무	직책	성명	전공	담당역할
연구책임	책임연구원	김기흥	농업경제	연구총괄, 현황 조사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참여	연구위원	강마야	농업경제	정책방안 검토
	책임연구원	최돈정	공간정보시스템 공학	공간DB구축 및 공간분석
외부 연구참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주	공간정보시스템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증분석
연구간사	연구원	한승석	지역개발	조례 검토 및 현장조사
	연구원	이도경	농업경제	현황 조사 분석 및 현장조사

1) 당초 과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당진시의 법률 분쟁으로 인해 과업이 연장되어 진행됨



# 제2장

##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 분석

---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률적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쟁점 검토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 검토



## 제2장 가축사육 제한구역 실태 분석

### 제1절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률적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법률적 정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설정

-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환경부에 의해 마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기반하여 설정되어 있음
- 환경부의 특성상 규제의 성격이 강하며 축산업 현실이 반드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법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고지됨

## 2. 선행연구 검토

### 1) 국내

#### ■ 환경부 권고안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을 위하여 2011년 환경부에서는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 권고안 내용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10호를 기준으로 함
  - 축종별 거리제한은 다음과 같음
  -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축종별 악취의 발생현황 및 퍼짐의 정도가 다르나 동일한 거리제한을 제시하고 있음
- 제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설정하도록 제시하였음

[표 2-2] 2011년 환경부 권고안

축종	거리제한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자료 : 환경부(201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 ■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설정 연구 제시안

- 환경부는 권고안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축산 민원으로 인하여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를 시행하였음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하였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시행하였음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한구역 안에 축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실제 축종별 거리에 따른 악취를 측정 및 분석하여 새로운 거리를 제시하였음
- 새로운 제한거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권고안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권고안이 제시되어 있음

[표 2-3] 2015년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제시안

축종	규모	거리제한
한·육우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	1,000마리 미만	400m
	1,000 ~ 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 ~ 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자료 : 환경부(2015),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 2) 일본

### ■ ‘가축분뇨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본의 가축분뇨법(1999년법률제112호)은 1999년에 제정(동년 7월 11일 성립, 11월 1일 시행)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지원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축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가고자 하고 있음
-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분뇨의 처리고도화를 위한 시설 정비 촉진 조치 등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를 적정화하고 이용 촉진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가축분뇨법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분뇨의 처리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축분뇨법)*

### ■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 방침

- 축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법에 의거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퇴비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이용촉진, 이외에도 퇴비 이용과 경작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형 농업을 위한 노력과 재생에너지화를 통해 축산분뇨와 관련한 문제 해결해나가고자 하고 있음
- 주요 대응 방향 및 세부 방안
  - － 첫째, 가축분뇨의 퇴비화 추진(비료나 토양 개량 자재로서 경지에 환원을 통해 잡초의 종자, 기생충, 병원체 살균효과 등 기대) : 적정량의 퇴비를 자신의 초지에 적용 원칙,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다른 관계자 등의 축산 클러스터 등 활용, 고령화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퇴비 센터, 컨트랙터, 도우미 조직 등 외부 지원 조직 활용, 퇴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 둘째, 가축 분뇨의 에너지로서의 이용 추진(지역수급 불균형 개선, 매전 등에 의한 수익 개선,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활용) : 전기, 열 등의 에너지

이용 추진을 통해 광열비 절감 및 매전 수입 증가에 의한 수익 개선, 전력의 고정 가격 매입 제도 등 활용, 발생하는 열 등의 에너지의 효과적 이용, 부산물의 비료 활용 등

- 셋째, 축산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악취 대책 및 오수 대책을 위한 적절한 가축 사양 관리, 시설 관리, 시설의 밀폐성이나 퇴비 생산, 에너지 이용률 강화 노력, 새로운 탈취 장치 및 기계, 시설 도입 등) : 시설·기계의 정비나 효과적인 처리기술 활용
- 처리고도화시설의 정비(송풍장치를 갖춘 퇴비사, 기타 가축분뇨 처리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와 관련해서는 정비는 물론, 정비 후 관리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기술지도 등 지원 체계 정비와 지역 실정에 정통한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의한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틀 구축,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최적의 처리 고도화 시설과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방식 명시 등 노력 필요
-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에 관한 기술향상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는 첫째, 기술 개발 촉진(메탄 발효 기술, 발전기 등 개발, 오수 처리 시설, 취기 저감 기술 등), 둘째, 정보 제공 및 지도에 관한 체제 정비를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야 함
- 이외에도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해 소비자 등의 이해 양성(퇴비를 사용한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시용한 농산물의 브랜드화, 낙농 교육팜에서 볼 수 있는 축산 체험학습 실시)으로 자원순환을 기본으로 한 축산업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이해 양성에 노력해갈 필요가 있으며 가축방역 관점에서의 적절한 퇴비화 철저 등을 통한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표 2-4] 일본의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 가축분뇨는 지금까지 축산업의 자원으로서 농산물과 사료작물의 생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음
- 하지만 축산경영의 급격한 대규모화의 진행 및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 인력부족 등이 진행되면서 가축분뇨의 자원으로서의 이용이 곤란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일본 정부가 전국적으로 자원순환형사회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짐과 동시에 환경의식의 고조에 따라 축산분뇨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를 확보하고 퇴비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땅가꾸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원으로서의 유효 이용을 한층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축산업의 축산분뇨 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내 축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자료: 농림수산성(1999)

### ■ 일본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일본의 ‘가축분뇨법’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지역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의 협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일본의 ‘가축분뇨법’은 농림수산성에서 마련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환경부에서 규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사정과는 다른 상황임

## 제2절 가축사육 제한구역 쟁점 검토

### 1. 구역 설정 관련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1.9)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상의 문제점

환경부(2011) 권고안 당시 문제점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문제점
-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등 용어의 혼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불명확
- 행정동으로 직접 명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운영
2. 주거밀집지역의 설정기준의 불명확
- 지방자치단체간 주거밀집지역 설정기준 상이
- 주거밀집지역 설정을 위한 최소 가구 수
- 빈집의 주거밀집지역 단위허용 여부
- 일시적인 주거형태 펜션 민박 등 의 주거밀집지역 허용여부
- 주거밀집지역 설정을 위한 가구간의 이격거리
- 주거밀집지역 설정을 위한 가구간의 이격거리 기준
3. 축종별 제한거리 설정
- 지방자치단체간 가축으로 정의하는 동물 상이
- 지방자치단체간 축종별 거리제한의 정도 상이
4. 가축사육에 의한 피해사례
- 소음 악취 축산폐수에 따른 수질오염에 의한 가축사육 농가 주변 피해민원발생
- 주변 주거생활지역에서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장
-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축사시설 허가 당시 기준보다 불법 증개축에 의한 경우
- 주거생활의 피해가 없도록 가축사육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논의 사항

### ■ 주거밀집지역에 관한 논의

- ‘가축분뇨법’ 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각 지자체에 따라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석하고 있음
- 광역시는 행정동 근거, 그 외 지자체는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지자체의 경우, 행정동 근거와 용도지역 구분 비율이 각각 50%로 나타남 (2011)
-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석하였으며 기타 용어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함. 단 녹지지역의 경우 녹지지역내 주거밀집지역으로 제한범위를 한정함
- 당진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로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15.12.15.〉

### ■ 주거밀집지역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 최소 가구 수의 경우 당진은 5호로 설정되어 있음
- 가구간의 이격거리: 현행 조례상에는 50m~100m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당진은 100m로 되어 있음
- 가구간 이격거리 기준: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등 다양하며 건축물 담장 및 외벽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고 있음. 당진은 건물외벽으로 설정되어 있음

### ■ 기타 지구 설정

- 생활환경보호필요지역

- 수질환경보호(수변지역)
- 환경기준초과지역

#### ■ 축종별 고려 사항

- 축종별 구분
  - 소: 한우, 젃소
  - 돼지: 분만돈, 비육돈, 자돈, 모돈
  - 닭: 산란계, 육계
- 축종별 오염도
  - 악취정도
  - 축산폐수량
  - 악취저감시설 여부 관련(현재, 악취탈취제 지원사업\_축산과, EM균\_기술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등 실시 중)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당진 300m)
  - 닭, 오리, 돼지: 500m(당진 2km)
  - 예외: 소, 돼지, 젃소 5두 이하, 닭, 오리 20수 이하



### 제3절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 검토

#### 1. 조사대상

##### 1) 충청남도

- 당진시가 포함되어 있는 충청남도 관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과 관련된 조례를 조사하였음
- 15개 기초자치단체 전체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 세부사항은 상이한 상황으로 당진시와 상이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음

##### 2) 충남도 제외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

-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조회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환경부에서 제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내용 중 제시하고 있는 각 축종별 상위 5순위에 포함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조례를 살펴보았음
  - 돼지와 개, 닭, 오리는 권고안 내에서는 같은 분류로 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돼지는 약취 민원과 관련한 주 민원 대상으로 분류하였음
- 분류된 축종의 사육두수를 적용하여 대상 기초자치단체를 선별한 이후 중복될 경우와 충남도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경우 차 순위를 적용하여 조례분석 대상을 선정함
- 선정된 축종별 대상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한 결과 각 광역자치단체별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충남도를 제외하고 전북도와 경기도가 5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음

[표 2-5] 시도별 선정 시군 수

총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	5	2	15	5	4	2	1	1

[표 2-6] 축종별 상위 사육두수 시군

(단위 : 마리)

순위	소, 젖소 (사육두수)		오리 (사육두수)		닭 (사육두수)		돼지 (사육두수)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1	안성시 (98,378)	안성시 (89,552)	나주시 (2,352,594)	나주시 (1,816,900)	포천시 (9,600,028)	포천시 (8,864,982)	이천시 (464,065)	홍성군 (550,859)
2	정읍시 (80,515)	경주시 (76,997)	영암군 (1,749,430)	영암군 (1,491,725)	나주시 (8,706,805)	남원시 (7,995,598)	홍성군 (455,570)	이천시 (505,624)
3	경주시 (77,599)	정읍시 (76,528)	음성군 (1,366,882)	음성군 (1,381,785)	남원시 (8,120,391)	익산시 (7,940,331)	제주시 (441,605)	제주시 (412,787)
4	상주시 (73,157)	상주시 (72,636)	고창군 (977,747)	정읍시 (988,993)	익산시 (8,032,742)	정읍시 (7,826,430)	안성시 (386,415)	안성시 (353,821)
5	청주시 (63,364)	청주시 (63,228)	정읍시 (958,456)	부안군 (758,613)	정읍시 (7,917,460)	나주시 (7,640,215)	정읍시 (371,767)	정읍시 (353,419)
6	안동시 (55,283)	홍성군 (55,769)	부안군 (821,713)	장흥군 (748,600)	천안시 (7,619,812)	천안시 (7,185,520)	당진시 (291,568)	보령시 (266,062)
7	홍성군 (54,414)	예산군 (51,669)	남원시 (810,510)	남원시 (654,983)	안성시 (6,766,628)	논산시 (6,954,080)	보령시 (269,689)	김제시 (259,065)
8	나주시 (51,854)	횡성군 (51,480)	장흥군 (800,000)	함평군 (592,000)	고창군 (6,695,440)	김제시 (6,689,205)	영천시 (254,700)	당진시 (245,683)
9	예산군 (51,711)	안동시 (50,807)	곡성군 (689,130)	무안군 (531,480)	부여군 (6,192,968)	안성시 (6,625,654)	포천시 (252,282)	포천시 (235,873)
10	화성시 (51,472)	나주시 (50,527)	무안군 (604,830)	강진군 (528,290)	당진시 (6,093,310)	여주시 (6,549,750)	천안시 (217,973)	무안군 (311,638)
11	횡성군 (48,617)	화성시 (47,126)	진천군 (562,666)	진천군 (507,166)	평택시 (5,860,422)	부여군 (6,439,388)	김제시 (210,613)	천안시 (210,818)
12	이천시 (47,095)	영주시 (45,934)	함평군 (517,512)	고창군 (488,698)	김제시 (5,729,245)	고창군 (6,332,618)	용인시 (201,487)	예산군 (209,925)
13	영주시 (46,592)	이천시 (45,420)	강진군 (500,615)	구례군 (485,300)	논산시 (5,717,760)	당진시 (5,982,065)	예산군 (195,683)	용인시 (200,833)
14	장흥군 (44,989)	영암군 (43,904)	구례군 (490,091)	안성시 (420,750)	여주시 (5,532,170)	의성군 (5,948,530)	무안군 (188,700)	합천군 (200,195)
15	공주시 (43,829)	공주시 (43,448)	해남군 (472,530)	해남군 (384,550)	음성군 (5,427,953)	김천시 (5,722,451)	여주시 (184,889)	논산시 (182,81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주 1 :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사육시설 현황의 사육시설 소재지 및 사육정보의 축종명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눔

주 2 : 분류별로 농업경영체가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계산되어 경영체 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3 : 한우 및 육우는 소에 포함되며 닭에는 산란계와 육계가 포함됨

## 2. 조사결과

### 1) 조례의 명칭

- 대부분의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과 관련된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나 명칭에 대해서는 3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지역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가축사육 제한 조례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제한을 제시하고 있음

[표 2-7] 조례의 명칭에 따른 분류

명칭	빈도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13	천안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안성시, 익산시, 부안군, 나주시, 무안군,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7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음성군, 김제시, 영암군, 장흥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5	용인시, 이천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여주시, 포천시, 청주시, 정읍시, 남원시, 경주시, 합천군
총계	35	

- 두 가지의 조례를 각기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와 두 개 모두 보유한 지자체가 존재하고 있음
  - 2가지의 조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축분뇨 관리 관련 조례에 가축사육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 지자체가 12개로 나타남

[표 2-8] 가축분뇨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례	내용	빈도	시군
가축사육제한 관련만 보유	가축사육제한	7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음성군
	모두 포함	-	-
가축분뇨 관리 관련만 보유	가축분뇨	3	계룡시, 남원시, 장흥군
	모두 포함	12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청주시, 정읍시,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 및 분뇨관리 2개 조례 보유	-	13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안성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경주시, 상주시
총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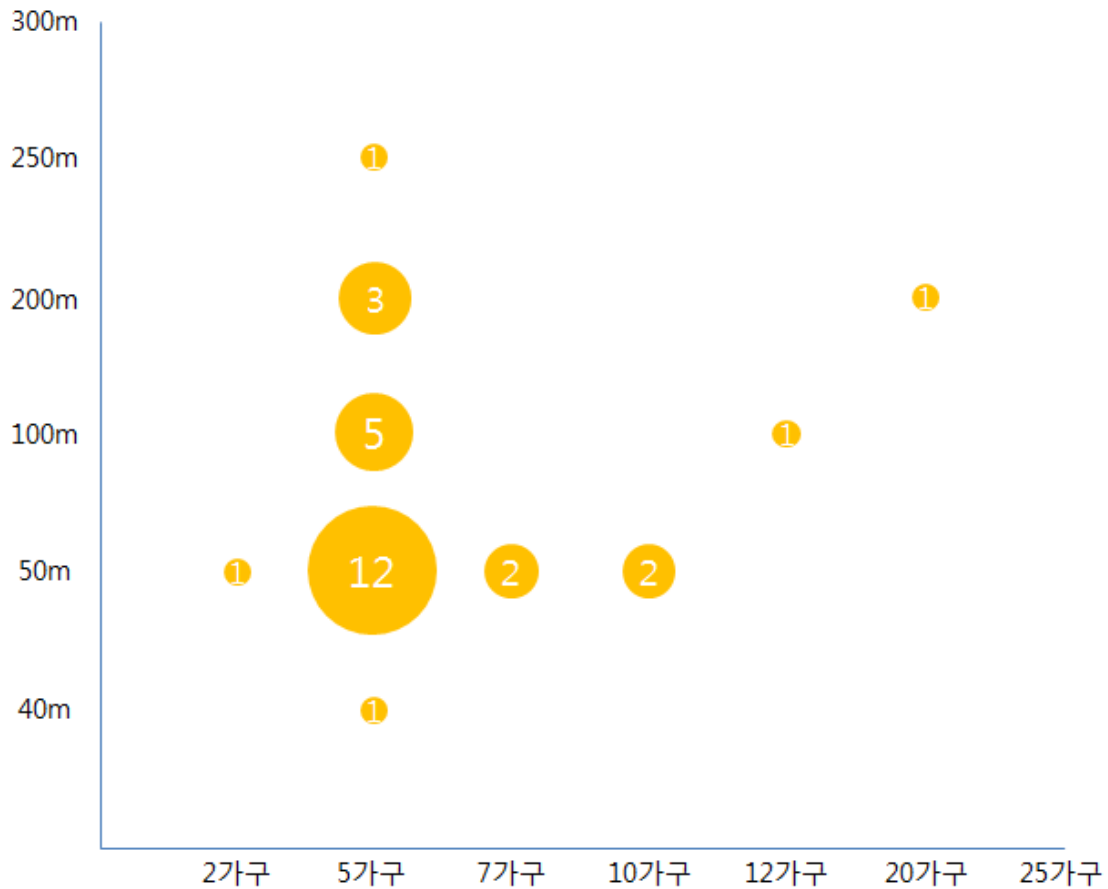
## 2)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분류

- 각 조례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최소가구 및 가구간 이격거리, 이격거리의 기준에 대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구의 분류는 공통적으로 자연마을로 선정하고 있음
  - 빈집의 경우 최소 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단서조항으로 ‘단수, 단전’ 등을 명시한 경우가 있음
  - 민박, 펜션 등의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태로 대체적으로 항상 거주하는 가구 수로 보는 경향임
  -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역시 최소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명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계룡시는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번을 제시하고 있음
  - 익산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음
  - 김제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5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경우 기준점이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이 소재한 부지경계’로 설정하고 있음

- 이천시는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용어가 아닌 인근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가구간 이격거리에 대해 선정한 지자체와 선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고 있음
  - 가구간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산시, 익산시, 영암군으로 이들 지자체는 거리제한에 대한 기준점 자체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선정한 지자체의 경우 최소 40m에서 최대 400m까지 다양한 이격거리를 선정해 놓았으며 가장 많은 14개의 지자체에서 가구간 이격거리를 50m로 선정해 놓은 상태임
- 계룡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설정이 아닌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지역을 활용하고 있음

[표 2-9]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당 이격거리에 의한 분류

구분	40m	50m	100m	200m	250m	기타
2가구		상주시				
5가구	금산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천군, 예산군,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무안군, 합천군	당진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나주시,	부여군, 태안군, 김제시	장흥군	이천시
7가구		경주시, 음성군				
10가구		논산시, 청주시,				서산시, 영암군
12가구			홍성군			
20가구				청양군		
기타						계룡시,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



- 주거밀집지역을 정의하기 위한 가구간 이격거리의 기준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계상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은 상황이며 기준 자체를 선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8곳이 존재하고 있음
- 전체적인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주택(건물), 외벽, 부지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세부적인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는 지적도, 임야도 등의 도표를 활용하여 계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무안군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 및 건축물이 아닌 인접건물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 “인접건물”이란 건물(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 최대 50미터 이내의 위치한 건물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이란 인접건물 5호(폐가는 제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경계”란 주거밀집지역의 건물외벽에서 50미터까지의 연결선을 말한다.
- 용인시에서는 주택간 거리에 추가적으로 전체 주택의 대지 경계선 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이 30미터를 이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표 2-10]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당 이격거리 기준에 의한 분류

이격거리 기준	빈도	해당 기초자치단체
건물외벽	8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포천시, 청주시, 음성군
주택건물 외곽거리	1	홍성군
건물 대지간 거리	1	안성시
부지경계선	3	논산시, 예산군, 여주시
주택간 부지경계선	1	청양군
주택간 거리	1	부여군
지적도 대지경계선	7	공주시, 금산군, 용인시, 경주시, 상주시, 장흥군, 합천군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3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본채 중앙	1	태안군
인접건물	1	무안군
기타	8	서산시, 계룡시, 이천시, 부안군, 익산시, 영암군,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35	

### 3) 축종별 제한거리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종별 악취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밀집지역과 제한거리를 설정하였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권고된 제시안을 활용하여 제한거리를 설정하였으나 각 지자체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천안시와 안성시의 경우 자체적인 등급과 각 등급별 축종을 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표 2-11] 축종별 악취등급 설정 현황

등급	천안시	안성시
1등급	돼지	돼지
2등급	닭, 오리, 메추리	닭, 오리, 메추리, 개
3등급	개	젖소, 사슴, 양, 염소
4등급	젖소	소(말 포함)
5등급	소(말 포함), 사슴, 양, 염소	-

주 :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임

- 2011년 환경부에서 작성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축종별 악취, 폐수량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 개의 경우 악취 및 폐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소음에 의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1등급으로 선정함

[표 2-12] 환경부 제시 등급 및 최소 제한거리

등급	축종	제한거리
1등급	돼지, 개, 닭, 오리	500m
2등급	젖소	250m
3등급	한우(말 포함)	100m

## ■ 소(한우/육우)

- 대체적으로 소(말 포함)의 제한거리가 가장 짧으며 돼지의 경우 가장 긴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음
- 소(한우/육우)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0m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 홍성군은 지역 내 신도시인 내포지역과 타 지역과의 다른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축사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청주시는 인구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계룡시 : 엄사면 유동2리 15, 20 ~ 21, 산56-1



- 부여군 : 축사면적 4,000㎡(500m), 축사면적 2,000 ~ 4,000㎡(300m),  
축사면적 2,000㎡ 이하(150m)
- 홍성군 : 내포 1,100m, 그 외 200m
- 청주시 : 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 500m, 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1,000m
- 김제시 : 5가구시 500m, 1가구시 250m
- 이천시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500m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부제한구역의  
분류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13] 소(말 포함) 제한거리

거리(m)	빈도	지자체
200 이하	11	장흥군, 무안군(100m), 포천시, 경주시, 태안군(130m), 서산시, 금산군, 나주시, 여주시, 영암군, 제주특별자치도(200m)
200 초과 ~ 500 이하	12	용인시, 합천군(250m), 보령시, 당진시, 청양군, 익산시(300m), 서천군(350m), 논산시, 예산군, 이천시, 남원시, 부안군(500m)
500 초과 ~ 1,000 이하	6	아산시, 상주시, 음성군(800m), 천안시, 공주시, 정읍시(1,000m)
1,000 초과	1	안성시(1,300m)
기타	5	계룡시, 부여군, 홍성군, 청주시, 김제시,
총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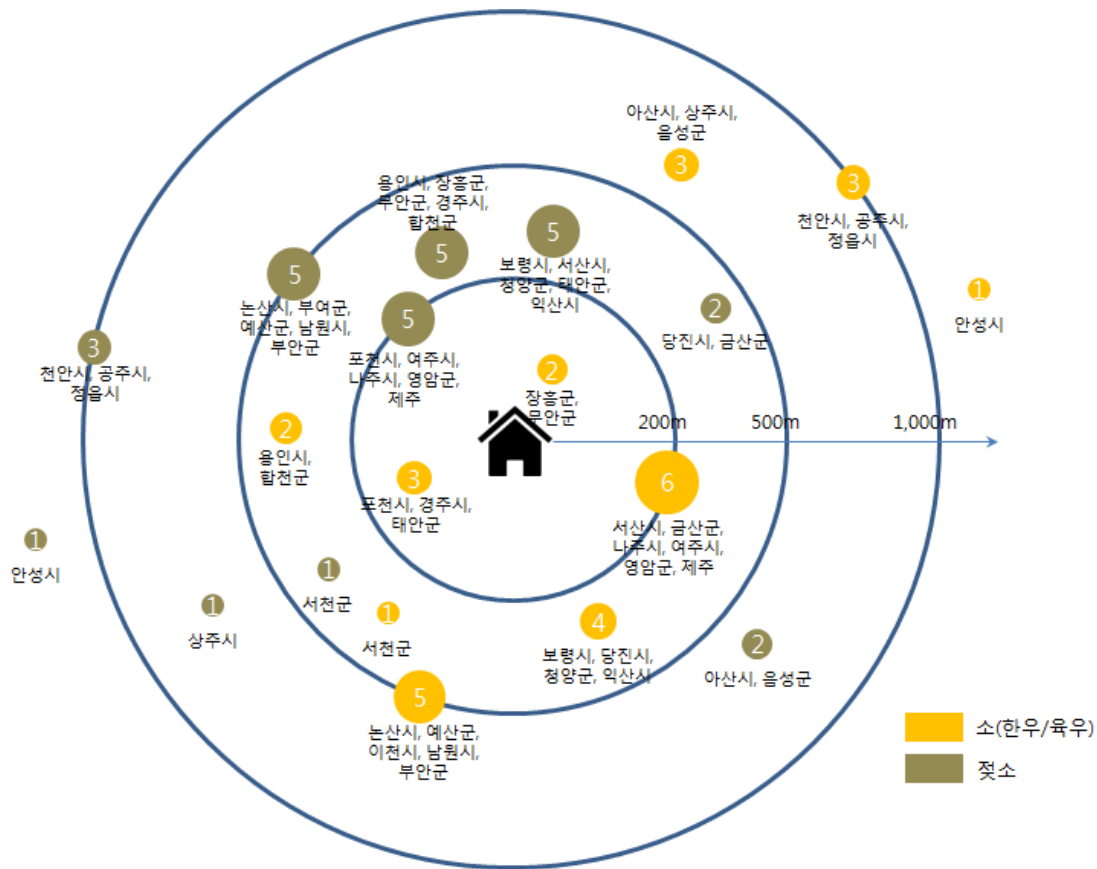
## ■ 젖소

- 젖소는 최소 200m에서부터 1,300m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200m, 250m, 300m, 500m로 설정한 지자체가 각 5개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에 비하여 높은 오염도를 보이는 이유로 멀리 설정되어 있으나 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제한거리로 설정됨
- 기타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계룡시 : 암사면 유동2리 15, 20 ~ 21, 산56-1
  - 홍성군 : 내포 1,100m, 그 외 300m
  - 청주시
    - 신고 : 500m(10가구), 1,000m(50가구)

- 허가 : 700m(10가구), 1,000m(50가구)
- 김제시 : 5가구시 500m, 1가구시 250m
- 이천시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500m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부제한구역의  
분류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14] 절소 제한거리

거리(m)	빈도	지자체
200 이하	5	포천시, 여주시, 나주시, 영암군, 제주특별자치도(200m)
200 초과 ~ 500 이하	19	장흥군, 용인시, 무안군, 경주시, 합천군(250m),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태안군, 익산시(300m), 서천군(350m), 당진시, 금산군(400m),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이천시, 남원시, 부안군(500m)
500 초과 ~ 1,000 이하	6	아산시, 음성군(800m), 상주시(900m), 천안시, 공주시, 정읍시(1,000m)
1,000 초과	1	안성시(1,300m)
기타	4	계룡시, 홍성군, 청주시, 김제시
총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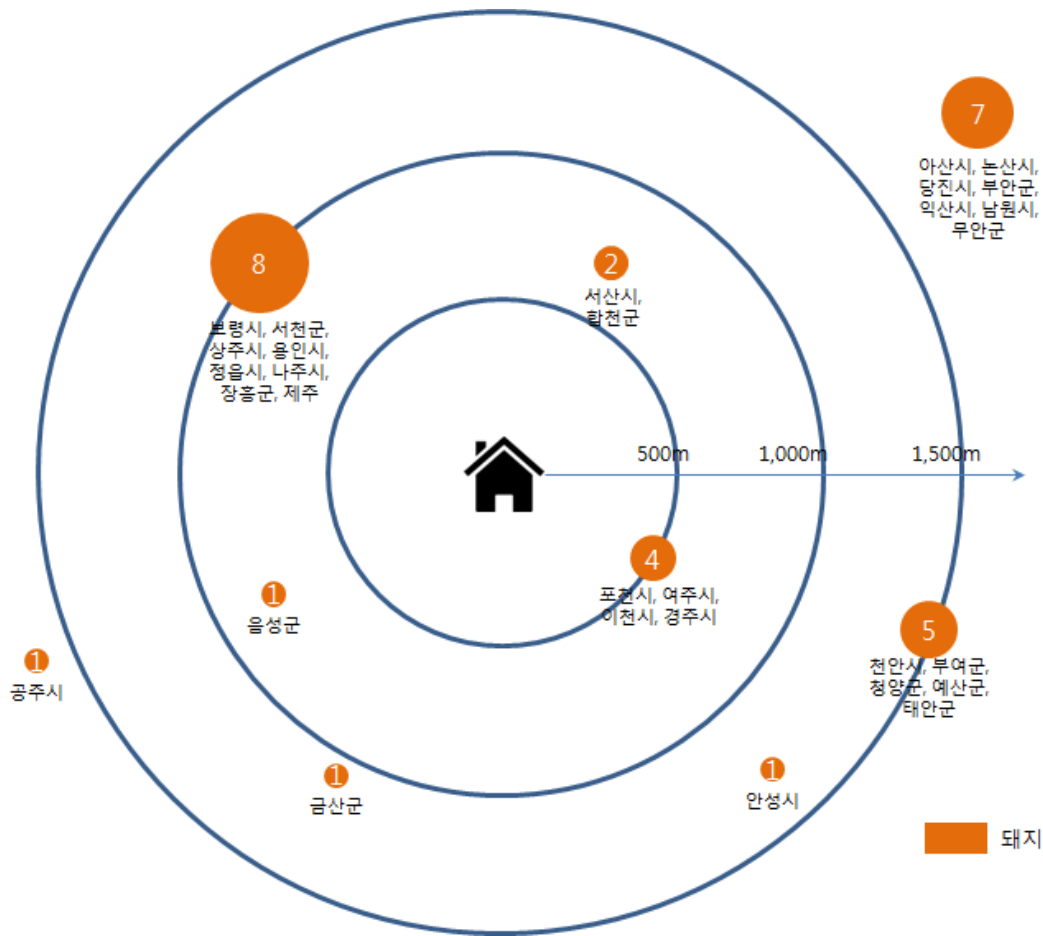
## ■ 돼지

- 돼지는 모든 축종 중에서 가장 긴 제한거리를 보이고 있으며 7곳의 지자체가 설정한 2,000m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곳이 지정한 1,000m의 제한거리였음
- 가장 짧은 제한거리는 500m로 경기도 지역의 여주시와 이천시, 포천시와 경북도 지역의 경주시가 이에 해당되며 서산시, 합천군, 음성군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1,000m 이상의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음
  -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비교적 짧게 나타났으나 이 지자체들에서는 거리제한 이외에 다양한 제한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 이천시의 세부적 전부제한구역, 포천시의 축사시설기준 등
- 기타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계룡시 : 엄사면 유동2리 15, 20 ~ 21, 산56-1
  - 홍성군 : 내포 1,100m, 그 외 1,000m
  - 청주시

- 신고 : 1,000m(10가구,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 허가 : 1,500m(10가구,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 김제시 : 5가구시 2,000m, 1가구시 1,000m
- 영암군 : 무창형인 경우 700m, 개방형인 경우 1,000m
- 이천시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500m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부제한구역의  
분류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15] 돼지 제한거리

거리(m)	빈도	지자체
1,000 이하	15	포천시, 여주시, 이천시, 경주시(500m), 서산시, 합천군(700m), 음성군(800m), 보령시, 서천군, 용인시, 상주시, 정읍시, 나주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1,000m)
1,000 초과 ~ 1,500 이하	7	금산군(1,100m), 안성시(1,300m), 천안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1,500m)
1,500 이상	8	공주시(1,700m),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안군, 익산시, 남원시, 무안군(2,000m)
기타	5	계룡시, 홍성군, 청주시, 영암군, 김제시
총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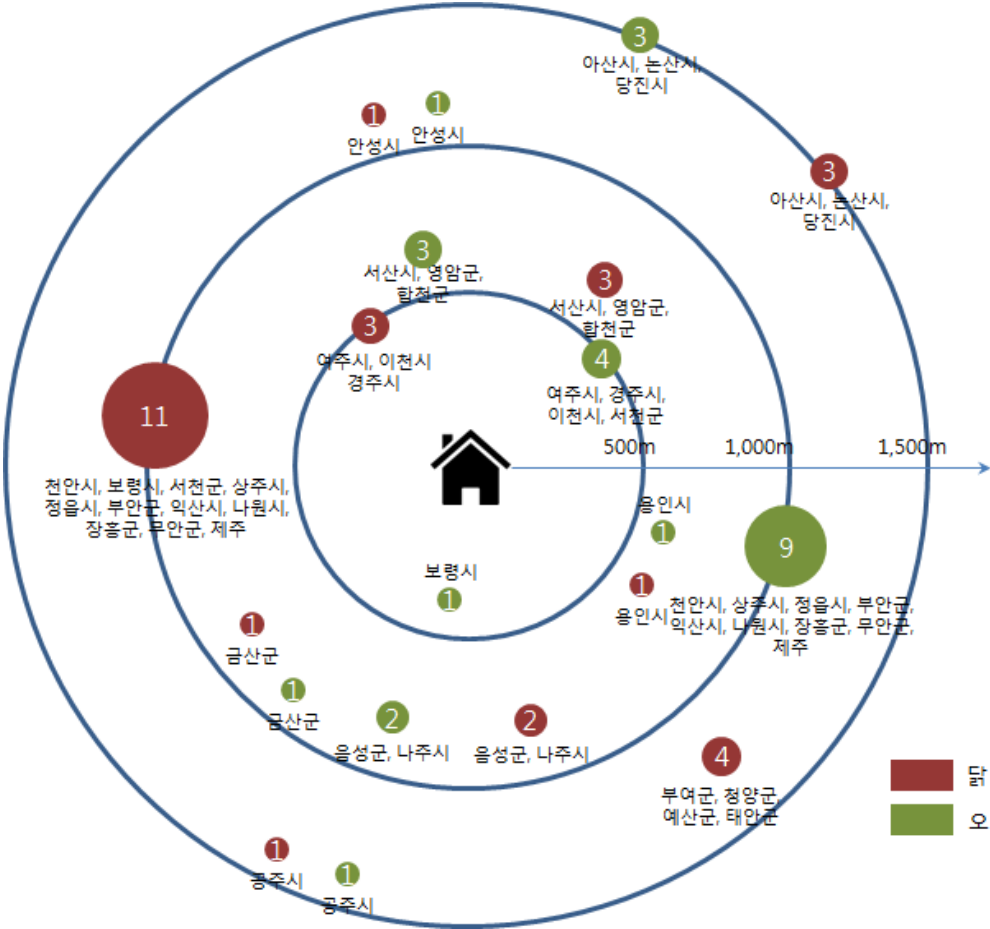
### ■ 닭 / 오리

- 닭과 오리의 경우 보령시와 서천군의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제한거리를 적용하고 있음
- 닭의 경우 500m에서 2,000m의 범위, 오리의 경우 400m ~ 2,000m의 범위 내에서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음
- 메추리의 경우 제한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으나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닭과 동일한 거리를 제한하고 있음
  - 계룡시 : 엄사면 유동2리 15, 20 ~ 21, 산56-1
  - 홍성군 : 내포 1,100m, 그 외 600m
  - 청주시
    - 신고 : 1,000m(10가구,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 허가 : 1,500m(10가구,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 김제시 : 5가구시 500m, 1가구시 250m
- 이천시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500m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부제한구역의 분류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16] 닭, 오리 제한거리

거리(m)	빈도	지자체
500 이하	3	이천시, 여주시, 경주시(500m)
500 초과 ~ 1,000 이하	18	용인시(650m), 서산시, 영암군, 합천군(700m), 음성군, 나주시(800m), 금산군(900m), 천안시, 보령시(오리 400m), 서천군(오리 500m), 상주시, 정읍시, 부안군, 익산시, 남원시, 장흥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1,000m)
1,000 초과	9	안성시(1,300m),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1,500m), 공주시(1,700m),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2,000m)
기타	5	계룡시, 홍성군, 포천시, 청주시, 김제시
총계	35	



#### 4) 축종별 제한거리 종합

- 분석대상인 35개의 지자체의 조례 중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조례 내용 중 축종별 거리제한에 대한 분석결과 악취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거리제한을 설정하고 있음
- 소과에 속하는 한우, 육우, 젖소가 거리제한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가 젖소에 비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구간인 500m 이하의 제한 거리에서 거리를 제정한 지자체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소의 경우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 다양한 분류를 제시한 경우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대 빈도수를 보면 돼지와 오리, 닭이 공통적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1,000m 이상에는 돼지의 경우에 15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오리와 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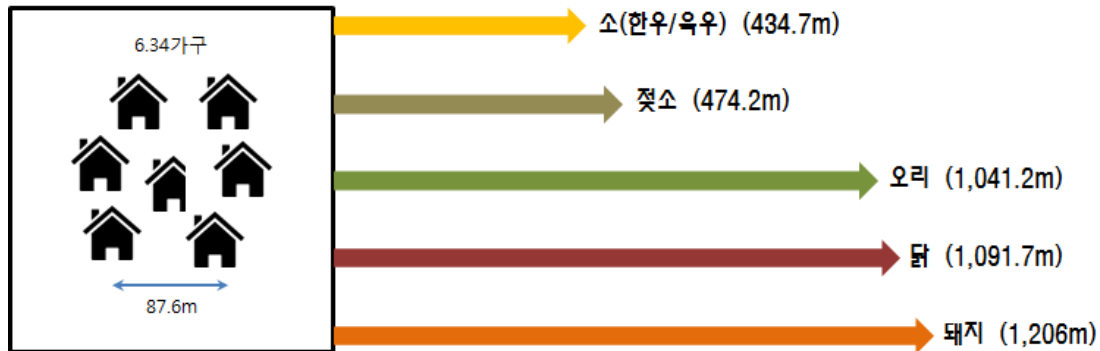
- 9개의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돼지의 거리의 제한이 강하다 할 수 있음
- 오리와 닭의 경우 큰 차이는 없으나 닭에 비해 오리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음
- 기타로 분류되는 지자체는 각 부분에 전체적으로 5개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젖소의 경우만 4곳으로 나타남
  - 부여군과 서천군에서는 소의 경우에 한하여 축사의 규모에 따라 거리제한을 제시하고 있음
  - 홍성군은 홍북면 일대에 형성된 내포신도시와 타 지역과 분리하여 제한거리를 설정하였으며 내포신도시의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넓게 제시되어 있음
  - 청주시는 각 가구의 수에 따른 제한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와 허가를 분리하였음(10가구와 50가구)
  - 계룡시에서는 가능한 지역을 지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에 설정된 지번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음
  - 돼지축사의 경우 영암군에서는 무창형과 개방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천시의 경우 모든 축종을 500m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부터의 가능 거리는 전부제한구역 상에 300m의 범위가 포함되어 실제 800m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무안군은 각 축종별 상이한 거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밀집지역경계”를 제시하여 실제 50m가 추가적으로 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용인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각 주택간 거리의 이격 평균거리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한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음



[표 2-17] 축종별 제한거리 종합

구분	소	젖소	돼지	오리	닭
500m 이하	23	24	4	5	3
500 ~ 1,000m	6	6	11	16	18
1,000 ~ 1,500m	1	1	7	5	5
1,500 ~ 2,000m	-	-	8	4	4
기타	5	4	5	5	5

- 3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기타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이후 각 분야별 평균을 계상한 결과 평균적으로 6.34가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구당 이격거리는 약 87.6m로 나타남
  - 각 가구간 거리를 규정하는 기준점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평균 이격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 각 축종별 거리제한 구역은 소(한우/육우)의 평균거리가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돼지가 1,206m로 가장 길게 나타남
  - 평균거리는 소 → 젖소 → 오리 → 닭 → 돼지 순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이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와 젖소의 차이는 약 50m로 큰 차이가 없으며 오리와 닭 역시 약 60m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큰 차이가 없었음
- 이와 같은 평균 이격거리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2015년에 시행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안보다도 강화되어 있음



[그림 2-1] 가축사육 제한거리 및 주거밀집지역 평균

## 5) 절대제한구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축사육의 절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등의 이름으로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 주거밀집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음

[표 2-18] 법령상 가축사육제한 지역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자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가축분뇨법)」 제8조

### 3. 지역별 특이점

#### 1) 법령 상 제시된 법률에 의한 제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상에 제시된 법령에 의하여 절대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수도법」의 경우 제7조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 － 이천시에서는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 합천군의 경우 이천시와 동일한 법령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제12조와 제38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과 특별대책지역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각 법령의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음

#### 2) 법령 상 제시되지 아니한 법률에 의한 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된 법령을 활용하여 절대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활용되고 있는 법률을 분류한 결과 생활환경과 관련된 법률과 자연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로 관광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이 사용되고 있었음

- 새만금사업지 유역과 인접해 있는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제28조를 근거로 김제시 용지면의 장신리·용수리·용암리 전

지역을 절대제한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용인시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 전체를 절대제한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익산시, 남원시 등도 이와 같이 제한하고 있음

[표 2-19] 절대제한구역 설정에 활용된 법률 현황

생활환경 관련	자연환경 관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i> <li>□ 학교보건법</li> <li>□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li> <li>□ 건축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공원법</li> <li>□ 지하수법</li> <li>□ 습지보전법</li> <li>□ 하천법</li> <li>□ 환경정책기본법</li> <li>□ 소하천정비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li> <li>□ 문화재보호법</li> <li>□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li> <li>□ 의료법</li> <li>□ 지방자치법</li> </ul>

### 3) 지자체 필요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및 기타 사항

■ 관련 법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내용의 경우 법령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법령과 같은 수준의 제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표 2-20] 기타 제시 현황

구분	지자체	내용
생활환경 관련	논산시	□ (도시지역 외 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 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예산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정읍시	□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지역 중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자연환경 관련	포천시	□ 지방하천·저수지 200m 이내(한탄강은 500m 이내)
	남원시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 이내의 대지
	정읍시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원구역, 옥정호만수위(계척홍수위) 경계에서 1km 이내 지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조수지와 소류지·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역에서 초식동물은 100m, 잡식동물은 200m 이내지역
	부안군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지역
	합천군	□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200m로 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의 지역 □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기타	이천시	□ 인근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20m 이내이거나 하천으로부터 30m 이내 □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사관련시설로부터 500m 이내
	익산시	□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남원시	□ 동충동, 죽향동, 하정동, 상교동, 노암동, 신촌동, 어현동, 금동, 천거동, 조산동, 왕정동, 향교동, 산곡동, 도동동, 월락동, 고죽동
	나주시	□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 정하는 지역
	장흥군	□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계룡시	□ 100가구 이상 아파트 경계(울타리)에서 300m이내 지역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경계(울타리)에서 300m 이내 지역

### ■ 기타 사항(행정처분, 과징금 등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2-21] 행정처분기준 비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령	허가취소			
		제주	허가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법령	허가취소			
		제주	허가취소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법령	허가취소			
		제주	허가취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법령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제주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5호	법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제주	사용중지 명령 1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령	사용중지 명령 1개월	폐쇄명령		
		제주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폐쇄명령	
		제주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5조제3호의 경우 제외)		법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허가취소
		제주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6조제5호의 경우 제외)		법령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제주	사용중지 명령 1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경우)		법령	없음			
		제주	경고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경우)		법령	없음			
		제주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8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제주	사용중지 명령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제주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폐쇄명령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사용중지 명령 3개월
		제주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제주	사용중지 명령 1개월	폐쇄명령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의적 무단배출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0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경고	허가취소		
		제주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제주	폐쇄명령			
1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법 제18조제1항제11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없음			
		제주	사용중지 명령 3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법령	없음			
		제주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폐쇄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1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법령	경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사용중지명령 3개월
		제주	사용중지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2호	법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제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3호	법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제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표 2-22] 과징금 산정기준

개별기준	법령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제주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6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구분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법령	제주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0.1	0.5
	1,000㎡ 이상 2,000㎡ 미만	0.2	0.8
	2,000㎡ 이상 3,000㎡ 미만	0.4	1.2
	3,000㎡ 이상 5,000㎡ 미만	0.8	1.4
	5,000㎡ 이상 10,000㎡ 미만	1	2.0
	10,000㎡ 이상	2	3.0
소, 젖소 또는 말	100㎡ 이상 900㎡ 미만	0.1	0.2
	900㎡ 이상 2,400㎡ 미만	0.2	0.4
	2,400㎡ 이상 3,600㎡ 미만	0.4	0.6
	3,600㎡ 이상 5,000㎡ 미만	0.8	1.0
	5,000㎡ 이상 6,000㎡ 미만	1	1.5
	6,000㎡ 이상	2	2.5
닭, 오리, 메 추리, 양, 사 슴 또는 개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1	0.2
	2,500㎡ 이상 7,500㎡ 미만	0.3	0.6
	7,500㎡ 이상 12,500㎡ 미만	0.6	1.0
	12,500㎡ 이상	1	2.0

방목 사육시설		부과계수	
종류	사육 마릿수	법령	제주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1	0.5
	715마리 이상	0.3	1.0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1	0.2
	75마리 이상	0.3	0.6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1	0.2
양·사슴	5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0.1
	1,500마리 이상	0.3	0.5

## ■ 조정 및 증축, 예외 항목

### • 증 · 개축

-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내에 증 · 개축과 관련하여 일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가축사육시설주의 의지에 의해서 무분별한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설정하였음
- 증 · 개축의 범위는 지자체별로 원 면적의 10%, 30% 등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유 역시 시설 현대화, 동 가축 혹은 오염발생이 적은 범위 내의 가축 사육으로 변경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표 2-23] 가축사육시설의 증 · 개축

지자체	내용
천안시	□ (증축)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있는 농가로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보령시	□ (증축)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10%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 · 재축 할 수 있다.
아산시	□ (증축) 천재지변, 재해(화재 등)로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면적 이내에서 재 · 개축할 경우는 예외로 증 · 개축이 가능하며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서산시	□ (증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육면적 3,300㎡ 이상은 등록된 면적의 20%, 3,300㎡ 미만은 등록된 면적의 30% 이내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태안군	□ (증축) 허가 ·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증 · 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증축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 · 신고된 면적의 3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금산군	□ (증축)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건축법상 증축,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은 기 허가 받은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최초 허가 받은 시설 규모의 25% 이내로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축법상 재축이 가능하다.
청양군	□ (증축)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의 증축은 100분의 70 이상 제한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홍성군	□ (증축)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2013.12.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단,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향사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예산군	□ (증축) 현대화사업 및 가축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저감되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일체를 개선하는 때에는 같은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축사:2015년 12월 23일) 면적의 20%까지 1회에 한하여 신축 및 증 · 개축을 허가한다.

지자체	내용
안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으나 다음 호에 포함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되어 있거나 허가되어진 농가 및 법인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단 별표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허용)</li>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li> <li>-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이전은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한다.</li> <li>- 안성시로부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업형 축사 면적 초과 및 증축은 불가하다.</li> </ul> </li> <li>□ (증축)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하는 부지에서 1회에 한하여 30% 이내로 한다. 단, 기업형 축사는 제외한다.</li> </ul>
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고발 1회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처분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한다.</li> </ul>
여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면적의 50% 이내. 다만,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 사육시설)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돼지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 이내</li> <li>□ (개축) 같은 부지에 신축하는 경우와 개축, 재축은 기존 시설면적 이내(증축 불가)</li> </ul>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축사가 화재·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모든 재해로 멸실된 경우 재축이 가능하며, 일부 제한구역에 한정하여 축사를 현대화하는 경우 동일한 규모 이하로 개축할 수 있다.</li> </ul>
음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축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li> <li>-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li> <li>- 해당 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li> </ul> </li> <li>□ (증축)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의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할 수 있다.</li> </ul>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증축을 허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li> <li>-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li> <li>-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축사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li> </ul> </li> </ul>
정읍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을 신·증축을 할 수 없다. 단,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신고)된 축사인 경우 축사 현대화 등의 사유로 기존 축사 철거 후 허가(신고) 사육면적의 100% 이내 재설치할 수 있다.</li> </ul>

지자체	내용
부안군	□ (증축)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축사 신축 또는 증축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장흥군	□ (증축)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상주시	□ (증축)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원칙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고) 받은 농가 및 법인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li> <li>-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축사를 300m 이상의 거리(소의 경우 100m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내에서 신축이전하는 경우. 단,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li> </ul>

• 신축 및 이전

[표 2-24] 가축사육시설의 신축 및 이전

지자체	내용					
천안시	□ (신축) 천안시에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구분	한·육우	젖소	양(염소포함)	사슴	말
	축사규모	1,200㎡ 이하	2,000㎡ 이하	1,485㎡ 이하	1,350㎡ 이하	1,350㎡ 이하
보령시	<p>□ (이전)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신축) 조례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제한구역 내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2013.12.31.축산업 등록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수 있다.</p>					
아산시	□ (이전)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영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논산시	□ (이전)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운 것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천시	□ (이전)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축사 부지를 전부 매입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여주시	<p>□ (신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오리·메추리·돼지는 500m, 개는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p> <p>□ (신축) 다른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 최대면적은 300% 이내. 다만,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 사육시설)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돼지는 500m, 개는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p>					
청주시	□ (이전)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같은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밖으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에 한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이전하려는 장소의 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야 하고 신축 축사의 규모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에 한하여 다른 인구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1,000m) 이내로의 이전은 불가하다.					
장흥군	<p>□ (신축)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도로법」 제10조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p> <p>□ (이전) 기존 가축사육제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가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돼지, 닭·오리, 개 사육시설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로 적용한다.</p>					

## • 조정

[표 2-25] 가축사육시설의 조정

지자체	내용
공주시	□ (조정)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여 가축사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산시	□ (조정) 지형도면 고시 이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변화의 경과를 5년마다 재조사 후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룡시	□ (조정)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당진시	□ (조정)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조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금산군	□ (조정)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여군	□ (조정)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청양군	□ (조정)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한다. -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군	□ (조정) 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예산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안성시	□ (조정)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천시	□ (변경)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주시	□ (조정)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내용
	- 주민의 요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정읍시	□ (조정)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남원시	□ (조정) 남원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나주시	□ (조정) 시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영암군	□ (조정) 축사(예정부지)로부터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한우는 50m로 한다.
장흥군	□ (조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경주시	□ (조정)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10년) 재정비시 한다.
상주시	□ (조정)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상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3장

##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

1. 당진시 일반 현황
2.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 제3장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 제1절 당진시 일반 현황

#### 1. 당진시 농업 관련 현황

##### ■ 농가 및 농가인구

- 2019년 현재 당진시의 농가는 11,160호로 충남 농가 119,903호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당진시 농가인구는 25,823명으로 충남의 농가인구 263,124명의 9.8%를 차지
-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남 단위에서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Delta 2.4\%$ 로 감소하고 있고, 당진시의 농가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Delta 0.8\%$ 로 감소
-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남 단위에서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Delta 3.9\%$ 로 감소하고 있고, 당진시는  $\Delta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충청남도 당진시 농가수, 농가인구 추이(5개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c=b-a)
충청남도	농가수	132,008	128,275	125,886	123,480	119,903	$\Delta 2.4\%$
	농업인구	308,455	296,801	288,800	276,426	263,124	$\Delta 3.9\%$
당진시	농가수	11,533	12,195	11,946	11,702	11,160	$\Delta 0.8\%$
	농업인구	27,230	30,532	28,309	26,870	25,823	$\Delta 1.3\%$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 ■ 경지면적

- 2019년 현재 당진시의 논밭별 경지면적은 24,429ha로 충남의 경지면적 210,428ha 대비 11.6%를 차지함.
- 2019년 당진시의 논 면적은 20,380ha이고, 밭 면적은 4,050ha로 밭에 비해 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지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남 단위에서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1%로 감소하고 있고, 당진시 역시 △1%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충청남도 당진시 논밭별 경지면적(2019년)

단위 : ha

행정 구역별	2015			2019			경지면적 연평균 증가율 (CAGR)
	경지면적: 계	논	밭	경지면적: 계	논	밭	
충남	218,787	152,677	66,110	210,428	145,785	64,644	△1.0%
당진시	25,422	21,200	4,223	24,429	20,380	4,050	△1.0%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시군별 논밭별 경지면적

## ■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 2015년 당진시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50대 이하가 전체의 7.1%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92.9%를 차지하고 있음
- 당진시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6.4세로 전국의 평균 연령 65.8세 보다 0.6세나 높게 나타나 충남 전체의 농업 부문에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
- 특히 충남의 경우 65~69세 비율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서산시도 65~69세 비율이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표 3-3] 충청남도 당진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

연령	충남	당진시
20-24세	12(0.0)	0(0.0)
25-29세	77(0.1)	3(0.0)
30-34세	391(0.3)	31(0.3)
35-39세	1,061(0.8)	69(0.6)
40-44세	3,060(2.3)	245(2.1)
45-49세	5,753(4.4)	476(4.1)
50-54세	11,018(8.3)	877(7.6)
55-59세	17,432(13.2)	1,409(12.2)
60-64세	19,204(14.5)	1,667(14.5)
65-69세	21,158(16.0)	1,951(16.9)
70-74세	20,128(15.2)	1,780(15.4)
75-79세	19,301(14.6)	1,784(15.5)
80세 이상	13,413(10.2)	1,241(10.8)
합계	132,008(100.0)	11,533(100.0)
평균 연령(세)	65.8	66.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 ■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

- 2015년 당진시의 경작규모별 농가의 비율은 경작규모 0.1ha 미만이 1.4%, 경작규모 0.1ha이상 1.0ha 이하 농가가 전체의 50.8%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지규모는 0.3~0.5ha로 충남 전체의 15.7%에 해당되었고, 당진시도 경지규모 0.3~0.5ha가 전체의 1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당진시의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는 전체의 4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 비율이 3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대부분 논(전) 농업을 통해 규모화·기계화된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4] 충청남도 당진시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ha/가구, %

경지규모별	충남	당진시
경지없음	1,183(0.9)	106(0.9)
0.1ha 미만	2,367(1.8)	165(1.4)
0.1~0.2	15,025(11.4)	975(8.5)
0.2~0.3	10,427(7.9)	683(5.9)
0.3~0.5	20,674(15.7)	1,526(13.2)
0.5~0.7	15,241(11.5)	1,180(10.2)
0.7~1.0	17,253(13.1)	1,492(12.9)
1.0~1.5	16,690(12.6)	1,461(12.7)
1.5~2.0	10,301(7.8)	1,099(9.5)
2.0~2.5	5,469(4.1)	606(5.3)
2.5~3.0	3,936(3.0)	455(3.9)
3.0~4.0	4,849(3.7)	595(5.2)
4.0~5.0	2,495(1.9)	302(2.6)
5.0~6.0	1,535(1.2)	213(1.8)
6.0~7.0	1,321(1.0)	192(1.7)
7.0~10.0	1,626(1.2)	241(2.1)
10.0ha 이상	1,616(1.2)	242(2.1)
합계	132,008(100.0)	11,533(10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지규모별 농가 및 경지면적

## ■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 당진낙농축협에서는 2012년 공동자원화시설을 준공하고(2009년부터 논의) 현재 200톤/일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친환경소재 개발사업(미국농무부 USDA 인증)을 통해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 및 농가 컨설팅 진행을 통해 미생물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

[표 3-5] 당진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개요

법 인 명	당진시 자연세계영농조합
위 치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461
사 업 비	152억원(지원63, 자담89)
면 적	대지 18,316㎡ / 건축 14,365㎡(액비화 4,215㎡, 퇴비화 10,150㎡)
처리규모	1일 200톤(분 100톤, 뇨 100 (최대 200톤 가능))
생산능력	액비: 40,000톤/년, 퇴비: 43,072톤/년
참여농가 및 규모	낙농-법인1(120호), 양돈-52호, 양계-2호
비전 및 목표	안정성과 품질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 기반 구축! 웰빙문화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의 기여! 농업의 미래 비전!

자료 :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djnch.nonghyup.com](http://www.djnch.nonghyup.com))

#### ■ 당진시 축산물 위생관계업소

- 2017년 기준 당진시 축산물 위생 관계업소는 223개 중 축산물 판매업이 169개로 가장 많았음
-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이 138개, 우유류 판매업이 20개로 나타났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0개, 식육포장처리업 13개로 나타남

[표 3-6] 당진시 축산물 위생 관계업소

단위 : 호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10	257	228	231	223
도축업		1	1	1	1	1
집유업		1	1	1	1	1
축산물 가공업	소계	11	7	13	6	6
	식육가공업	2	5	12	5	5
	유가공업	1	1	1	1	1
	알가공업	1	1	-	-	-
식육포장처리업		7	12	12	16	13
축산물보관업		2	2	2	2	2
축산물운반업		-	1	1	1	1
축산물 판매업	소계	195	233	198	181	169
	식육판매업	178	203	168	150	138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2	2	2	2	2
	우유류 판매업	13	18	18	20	20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1	6	6	5	5
	축산물수입 판매원	1	-	-	-	-
	식용란수집 판매업	-	4	4	4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3	30

자료 : 당진시청 통계연보, 축산과



## 제2절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 1.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2019년 기준)

#### ■ 당진시는 소 사육에 집중

- 2018년 당진시의 축종에 따른 축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축사수 3,511개소 가운데 소가 1,211개소(젖소 포함)로 당진시 축사 전체의 34.5%, 돼지는 155개소로 전체의 4.4%, 닭은 473개소로 전체의 1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축종으로는 전체 축사수 대비 소 사육 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기타 축종으로는 말, 염소, 면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를 포함함

[표 3-7] 당진시 축종에 따른 축사 현황(2018년)

(단위 : 개소, %)

시 군	전체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축사수	축사수	%	축사수	%	축사수	%	축사수	%	축사수	%
충 남	49,654	15,063	30.3	1,162	2.3	6,665	13.4	174	0.4	26,590	53.6
당 진 시	3,511	1,211	34.5	155	4.4	473	13.5	3	0.1	1,669	47.5

자료: 2019 충남 통계연보

#### ■ 당진시의 닭 사육두수 전체 충남 대비 비율은 높은 편

- 2018년 당진시 가축 사육두수 현황을 살펴보면 당진시는 닭의 경우 5,836,792두로 충남 전체의 12.6%, 돼지는 302,462두로 12.5%, 소는 40,968두로 충남 전체의 9.4%에 이르고 있음
- 당진시 전체의 가축 사육두수 중 가장 많은 축종은 닭으로 가축 사육농가 (소, 돼지, 닭, 오리 농가만 산정)의 94.4%가 닭을 사육하고 있음

[표 3-8] 당진시 가축 사육두수 현황(2018년)

(단위 : 두수, %)

시군	소		돼지		닭		오리		총합계
	사육두수	비중 (%)	사육두수	비중 (%)	사육두수	비중 (%)	사육두수	비중 (%)	
충남	435,497	0.9	2,424,318	4.9	46,470,183	93.5	377,430	0.8	49,707,428
당진시	40,968	0.7	302,462	4.9	5,836,792	94.4	17	0.0	6,180,239

자료: 2019 충남 통계연보

## 2.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2020년 5월 기준)

### ■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DB

-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xlsx’ 원자료 (raw data)에 수록된 사육두수, 동수, 면적 등의 다양한 속성정보를 이용
- 아래 [표 3-9]는 축종별 축사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을 집계하여 요약한 결과임
- 표를 보면 사육두수의 경우 육계, 산란계, 종계가 전체의 약 99%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축사면적의 경우는 한우와 돼지가 각각 29.1%와 24.8%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젓소와 육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기타 축종은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 아래 [표 3-9]와 [표 3-10]은 2020년 5월 현재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원자료를 예시함

[표 3-9] 당진시 축종별 축사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집계 결과

축종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육계	301	3,317,594	179,385
	9.55%	59.68%	11.99%
산란계	40	1,026,000	40,546
	1.27%	18.46%	2.71%
종계	173	849,750	139,470
	5.49%	15.29%	9.32%
돼지	895	319,420	371,654
	28.40%	5.75%	24.84%
한우	1,251	29,506	435,867
	39.70%	0.53%	29.13%
젖소	387	13,570	304,713
	12.28%	0.24%	20.37%
염소	46	1,221	4,568
	1.46%	0.02%	0.31%
평	1	1,000	300
	0.03%	0.02%	0.02%
산양	11	308	1,753
	0.35%	0.01%	0.12%
육우	29	669	14,481
	0.92%	0.01%	0.97%
사슴	17	225	3,515
	0.54%	0.00%	0.23%
총합계	3,151	5,559,263	1,496,252

- [표 3-10]은 [표 3-9]의 축종을 취합하여 재집계한 결과로 사육두수의 경우 돼지와 모든 유형의 닭이 전체 사육두수(5,559,263)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0] 취합 축종별 재집계결과

취합 축종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돼지_닭(산란계/육계/종계)	1,409	5,512,764	731,055
한우/육우/젖소	1,667	43,745	755,061
기타(騾/사슴/산양/염소)	75	2,754	10,136
총합계	3,151	5,559,263	1,496,252

# 제4장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 실증분석

---

1. 분석의 개요
2.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분석
3. 당진시 주거지와 축사 간 공간적  
분포특성 실증분석
4. 소결



## 제4장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 실증분석

### 제1절 분석의 개요

- 가축사육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및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로 반영할만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제시하였음
- 권고안에는 주거지 밀집도와 축종별 악취의 발생 현황 및 전파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축종별 거리 제한의 범위를 담고 있음
- 2011년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소·말의 경우 100m,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 농가의 경우는 500m의 이격거리를 거리제한 규모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음
- 그러나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당진시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경우 특히 닭·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거의 전 지역이 제한구역 내에 포함되는 실정임
- 이에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용할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제2절 당진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분석

-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공간 DB를 구축하였음
- 우선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xlsx’ 원자료(raw data)에 수록된 축사 주소정보를 지오코딩(geo-coding)하여 축사의 위치정보(x-y 좌표)를 추출하였음. 축사의 위치정보는 주거지까지의 거리 계산에 필수적인 정보임
-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원자료에는 사육두수, 동수, 면적 등의 다양한 속성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아래 [그림 4-1]은 2018년 5월 현재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원자료를 예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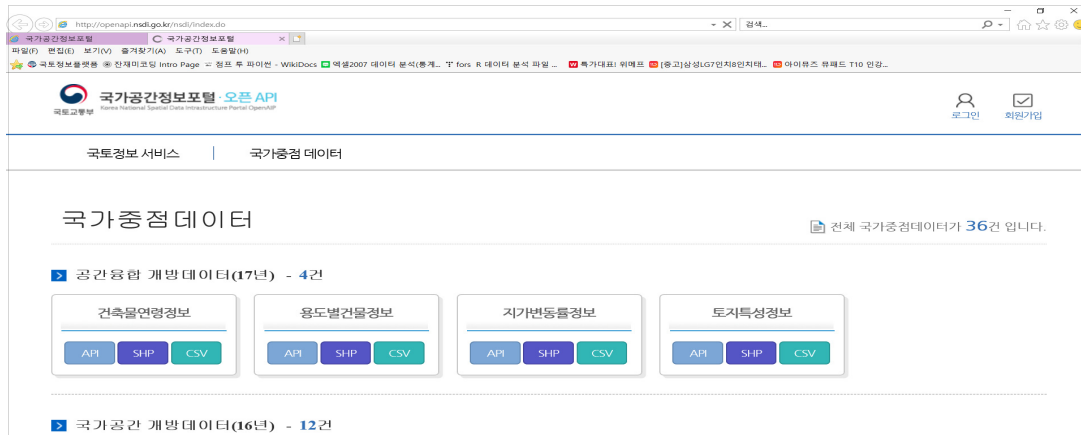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축종	농장주	거주지	축사주소(지번)	축사주소(도로명)	사육두수	동수	면적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317번지 3호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345-61	52,000	7	7,180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245-2번지 외3필지		22,000	5	3,837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송산리 62번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4.4만세로 562-38	16,500	3	2,680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세류리 120번지 13호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세류로 112-15	22,000	8	5,438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산 31번지 1호		18,700	10	5,951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13번지 23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159	38,500	10	6,573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 304번지 2호		32,000	6	6,294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661번지 8호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거점들2길 15	22,000	5	3,576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618번지 13호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봉소안길 11	25,300	8	2,911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산 23번지 1호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구울미길 55-40	17,500	4	3,200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리 85번지 3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사들구지길 45	14,500	3	1,965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본리 87번지 1호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가화로 187	39,600	4	6,480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 35번지 2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독우물길 104-16	20,000	4	3,968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1번지 146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사들구지길 227-17	44,850	7	7,488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971번지 39호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예덕로 39	17,600	8	4,500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대전리 산 79번지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내동로 134-11	50,000	5	7,619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27번지 21호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재오지1길 101-28	57,500	15	10,954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리 85번지 6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사들구지길 62	28,750	9	4,585
종계	****	*****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907번지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866-49	17,000	7	2,562

[그림 4-1]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 원자료

- 이들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및 축산폐수·분뇨에 의한 잠재적 피해도 추정을 위하여 주거지 정보 역시 공간 DB로 구축하였음. 이때 주거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지칭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간 DB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내 「오픈API - 국가중점개방데이터API」로부터 각 건축물의 도형정보(건축물 경계) 및 건물 특성정보(건축법에 따른 건물 용도, 연면적 등)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음(아래 [그림 4-2] 참조)<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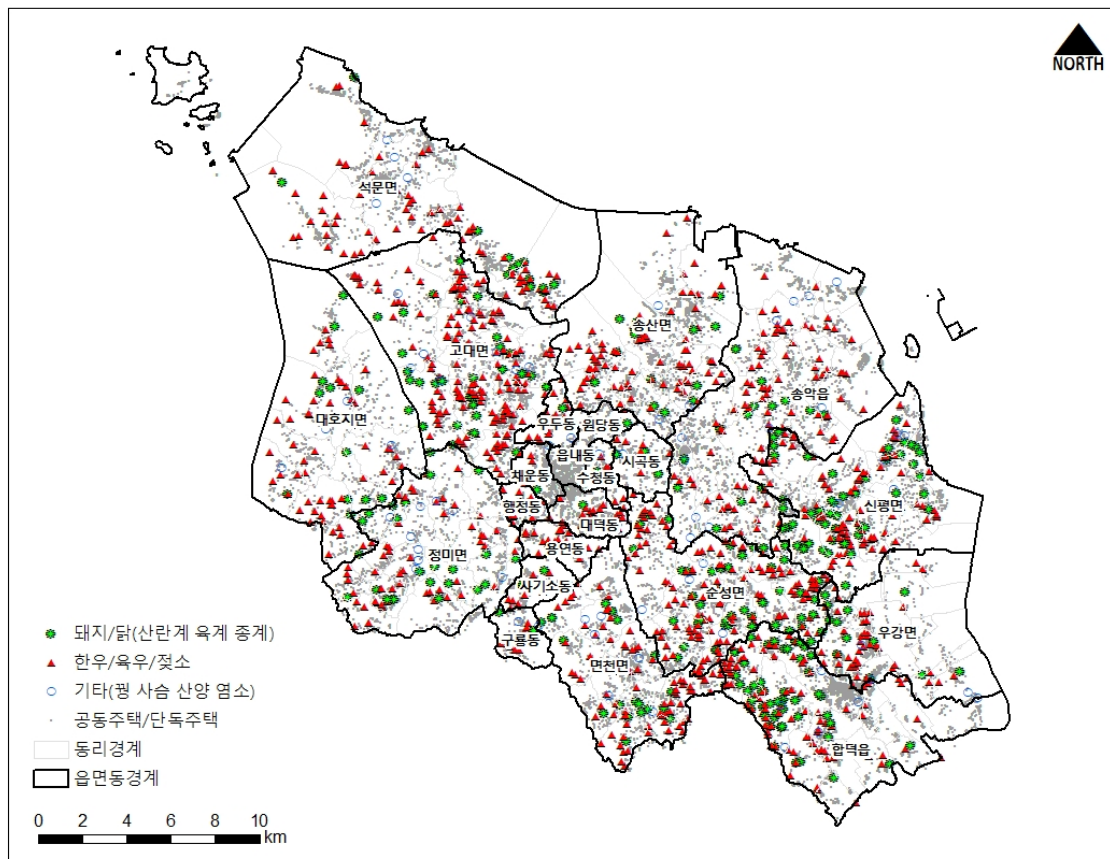
2) <http://openapi.nsd.kr/nsdi/index.do>





[그림 4-2] 주거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간 DB 구축을 위한 자료원(data source)

- 참고로, 국가중점개방데이터API는 전국 모든 건물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본 분석에 필요한 당진시 내 건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들만 추출하여 주거지 정보로 활용하였음
- [그림 4-3]은 주거지 건물(단독주택+공동주택)과 축사의 위치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임



[그림 4-3] 당진시 주거지 및 축사의 분포현황

- 위 그림에서 작은 회색 사각형은 주거지 즉,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위치를 나타내고, 돼지와 닭(산란계/육계/종계)은 초록색으로 채워진 원으로, 한우/육우/젖소는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음. 기타 축종인 꿩/사슴/산양/염소는 파란색 테두리 원으로 표시됨
- 한우/육우/젖소 및 돼지/닭 농가가 전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 4-1]은 축종별 축사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을 집계하여 요약한 결과임
- 표를 보면 사육두수의 경우 육계, 산란계, 종계가 전체의 약 93%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축사면적의 경우는 한우와 돼지가 각각 28.8%와 24.61%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젖소와 육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기타 축종은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표 4-1] 당진시 축종별 축사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집계 결과(18년 5월 기준)

축종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육계	343	3,642,911	202,304
	9.63%	60.21%	13.40%
산란계	53	1,273,650	48,100
	1.49%	21.05%	3.19%
종계	161	771,700	130,073
	4.52%	12.75%	8.62%
돼지	943	317,027	371,458
	26.48%	5.24%	24.61%
한우	1,469	29,095	434,699
	41.25%	0.48%	28.80%
젖소	460	12,430	293,457
	12.92%	0.21%	19.44%
염소	43	1,124	4,408
	1.21%	0.02%	0.29%
꿩	1	1,000	300
	0.03%	0.02%	0.02%
산양	20	707	2,589
	0.56%	0.01%	0.17%
육우	43	675	17,770
	1.21%	0.01%	1.18%
사슴	25	246	4,383
	0.70%	0.00%	0.29%
총합계	3,561	6,050,565	1,509,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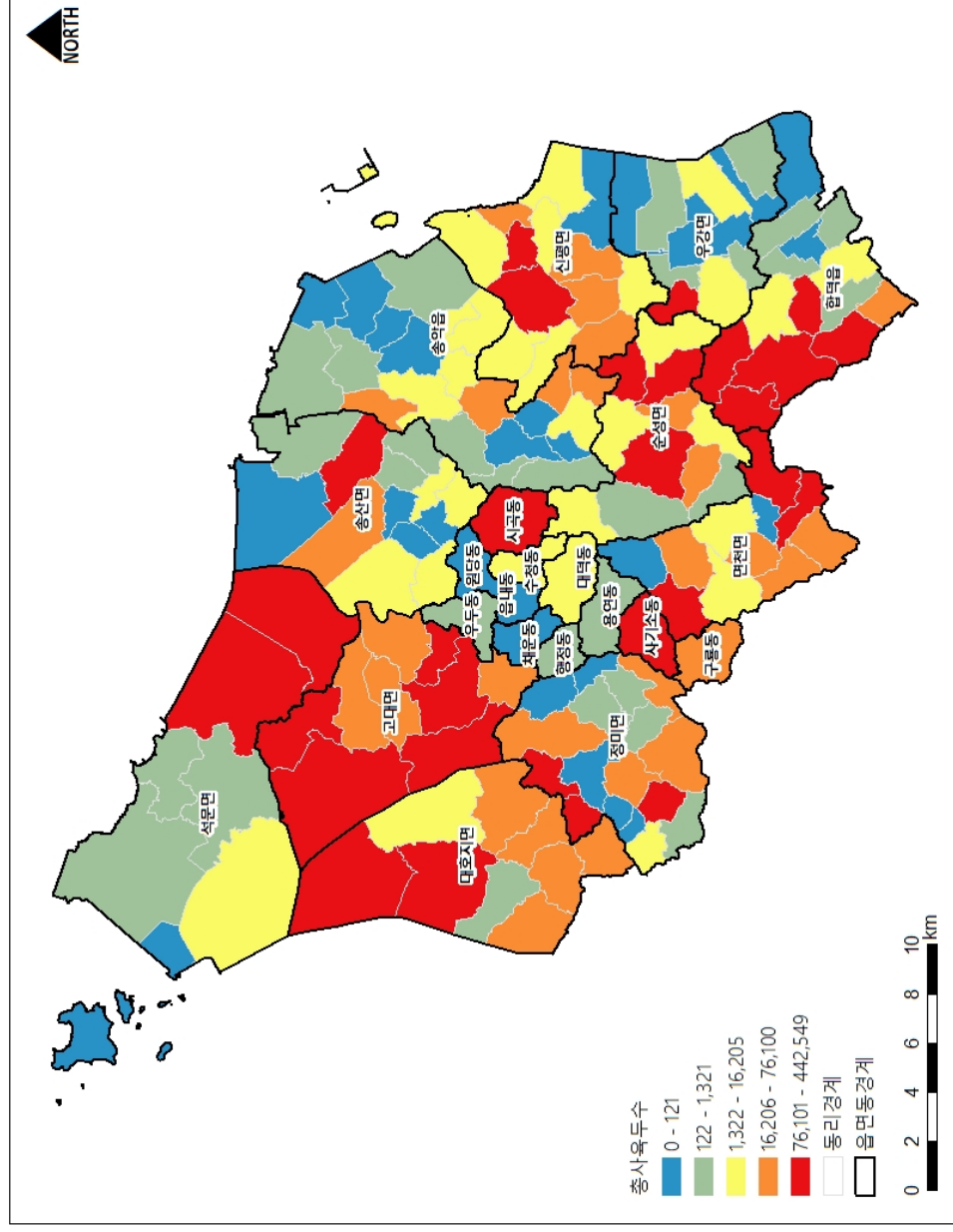
- [표 4-2]는 [표 4-1]의 축종을 취합하여 재집계한 결과로 사육두수의 경우 돼지와 모든 유형의 닭이 전체 사육두수(6,050,565)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4-2] 취합 축종별 재집계결과(18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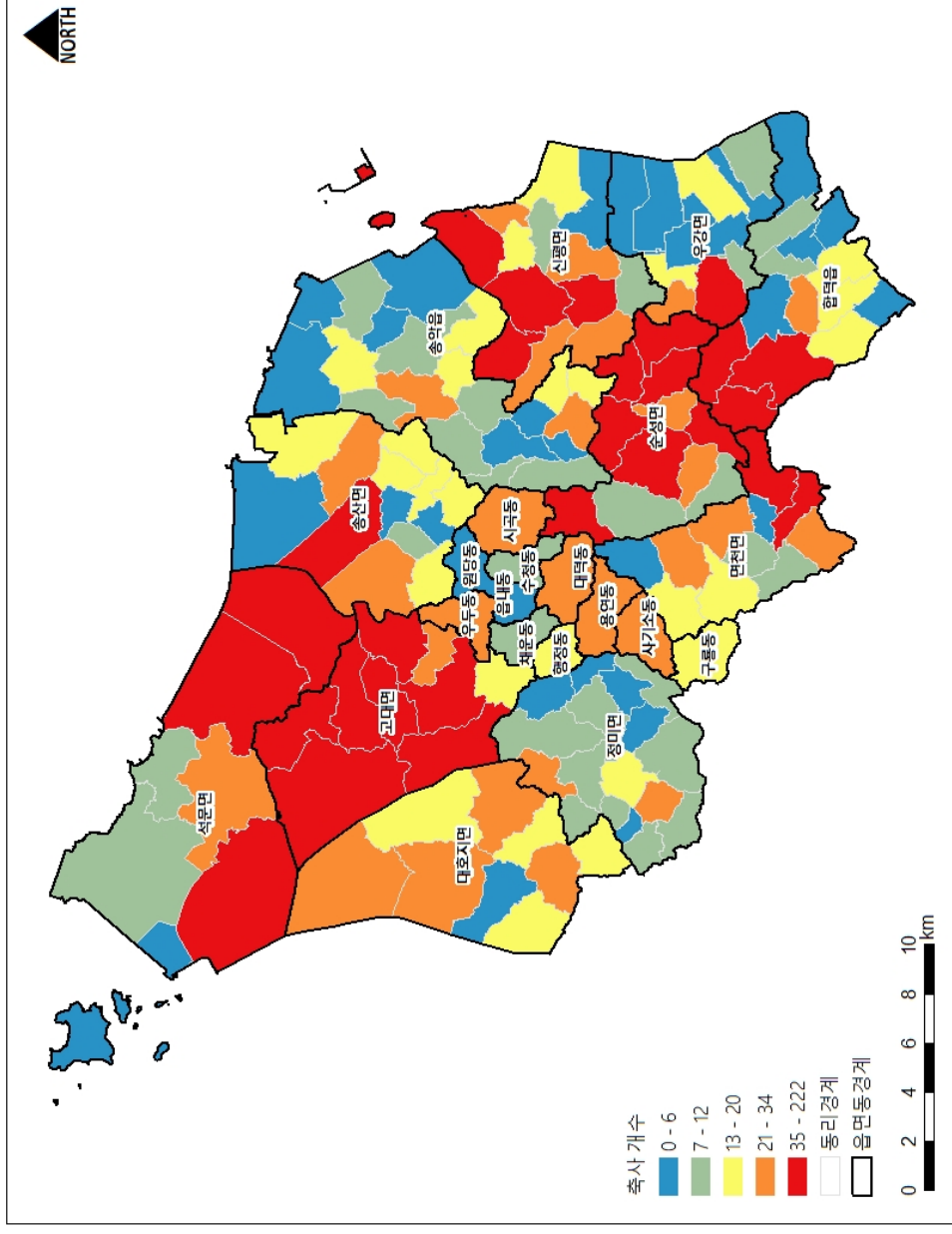
취합 축종	동수	사육두수	축사면적
돼지_닭(산란계/육계/종계)	1,500	6,005,288	751,935
한우/육우/젖소	1,972	42,200	745,926
기타(騾/사슴/산양/염소)	89	3,077	11,680
총합계	3,561	6,050,565	1,509,541

- [그림 4-4]는 모든 축종에 대하여 동·리 단위 총사육두수를 5분위 등도수(quantile) 급간 구분방식을 적용하여 단계구분도(choropleth map)로 시각화한 것으로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사육두수 상위 25%에 해당하는 동 혹은 리 지역임
- [그림 4-5]와 [그림 4-6] 역시 동·리 단위 축사의 개수 및 총면적을 역시 5분위 등도수 급간 구분방식으로 생성한 단계구분도임
- [그림 4-4]를 보면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신평면, 고대면, 대호지면, 석문면 일대를 중심으로 총사육두수가 최소 76,101마리 이상으로 집계된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4-5]와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이 축사의 개수 및 축사의 총면적 역시 총사육두수의 경우와 유사한 동·리 단위 공간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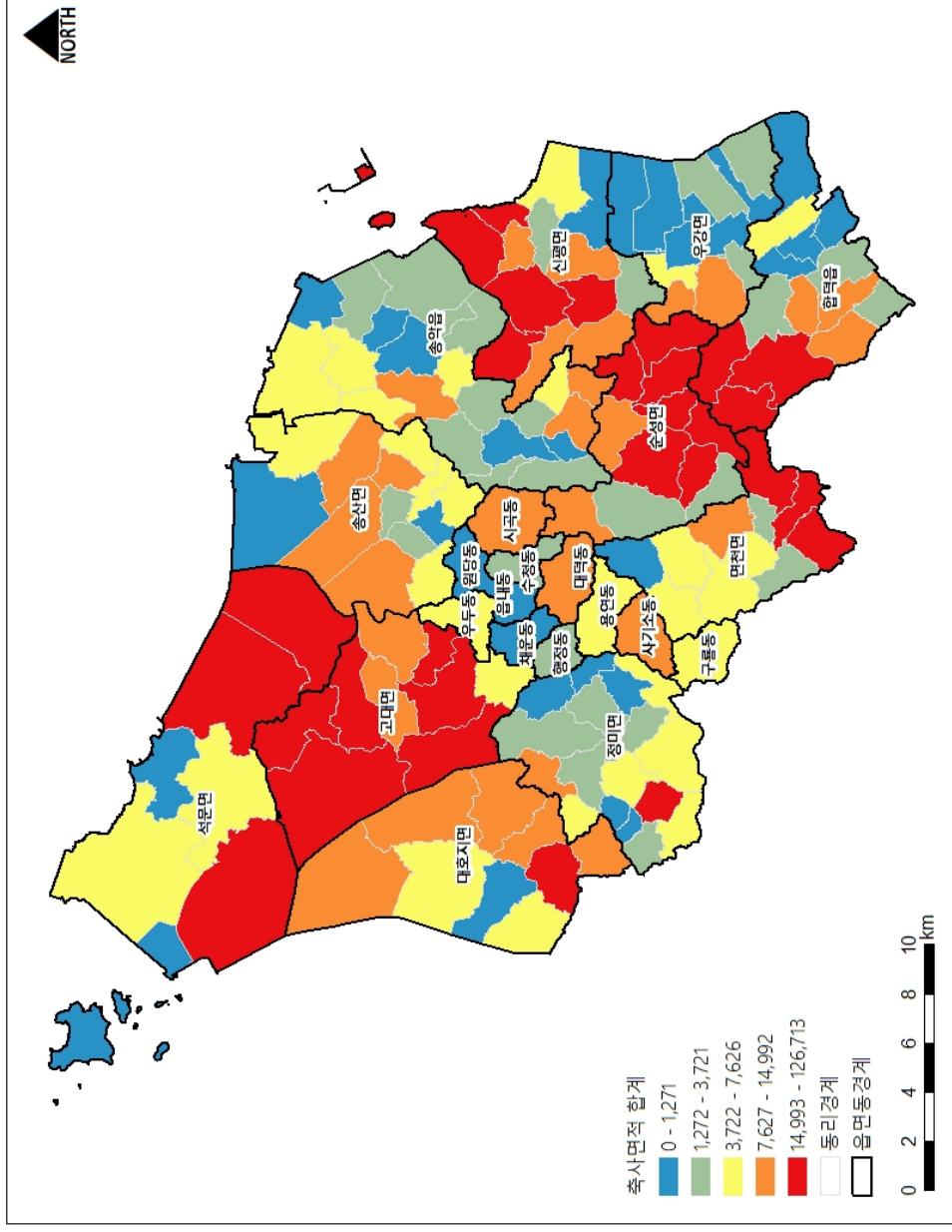
## 제4장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기준 설정분석서



[그림 4-4] 동·리 단위 총시육두수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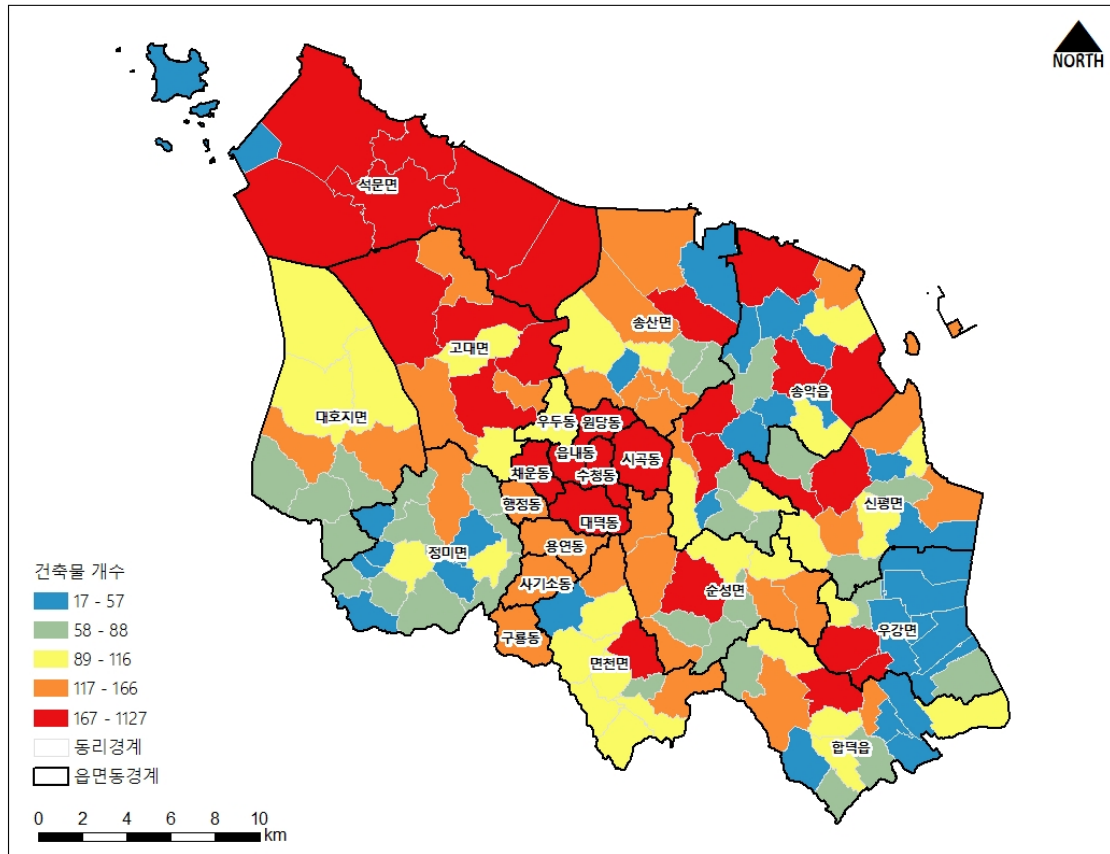


[그림 4-5] 동·리 단위 축사 개수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그림 4-6] 동·리 단위 축사면적( $m^2$ ) 합계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 [그림 4-7]은 동·리 단위로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 공동주택)의 개수를 집계하여 나타낸 지도로 이 역시 5분위 등도수 급간 구분방식을 적용하여 생성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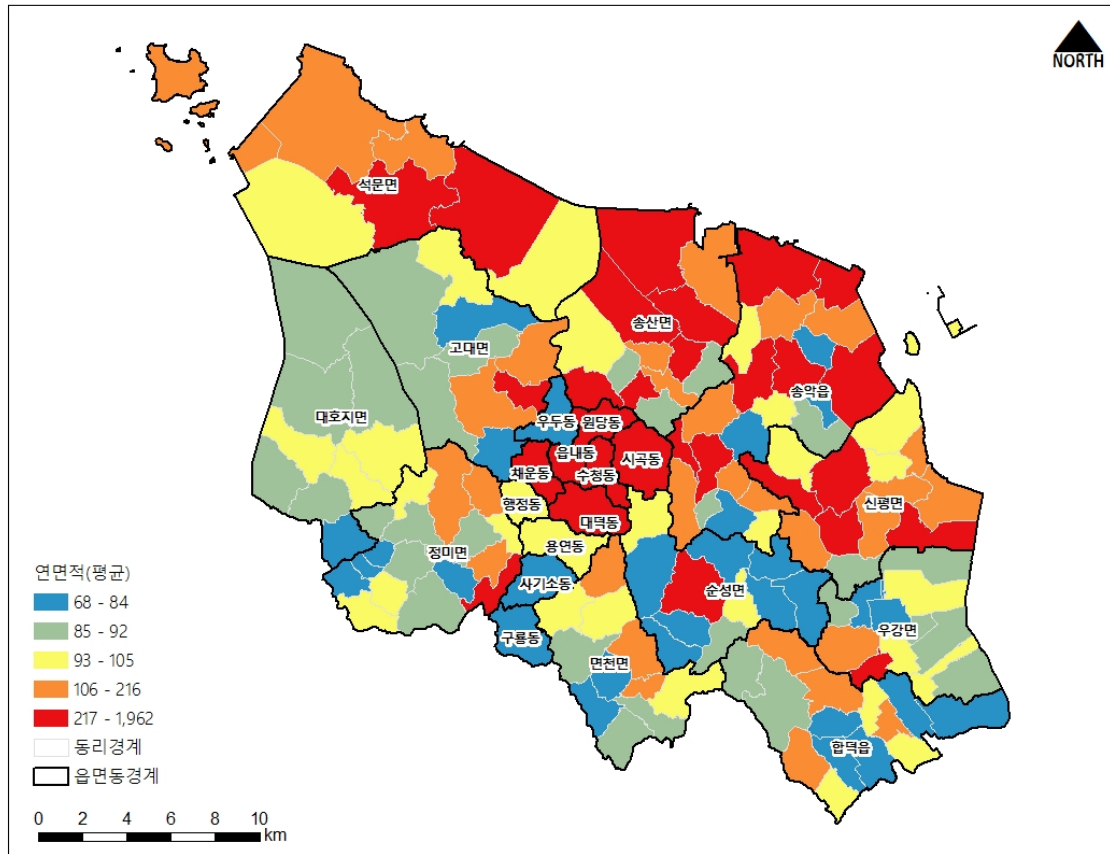


[그림 4-7]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개수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 그림을 보면 당진시 중앙 지역에 분포하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 밀집하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읍·면의 경우 석문면과 고대면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수 기준 상위 25%에 해당하는 동·리 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음
- 특히 고대면, 석문면, 순성면, 합덕읍, 신평면 일부 리 지역의 경우 축사가 밀집하고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사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및 오·폐수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가 우려됨
- [그림 4-8]은 동·리 단위로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결과를 단계구분도로 나타낸 결과로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개수의 단계구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연면적이 큰 값을 가지는 리 지역의 경우 [그림 4-7]의 총건물수의 경우와 비교하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인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8]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단독주택/공동주택)의 연면적 : 5분위 등도수(quantile)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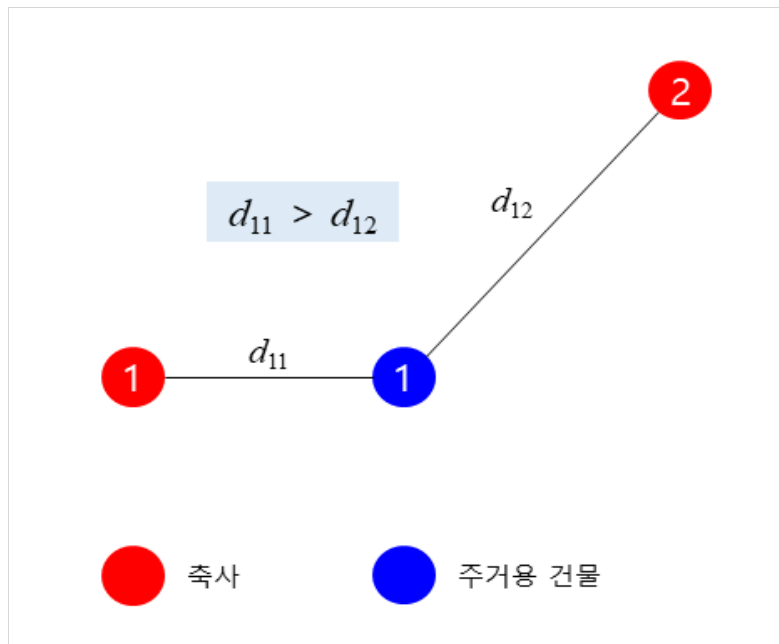
- [표 4-3]은 주거지 유형별 총건물수와 총연면적을 집계하여 요약한 결과로 주거용 건물 20,158개 중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그림 4-7]과 [그림 4-8]을 비교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인구 밀도가 동지역 및 인접한 리 지역에서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표 4-3] 주거지 유형별 연면적 및 건물수

주거지 유형	총연면적( $m^2$ )	총건물수
공동주택	3,074,332	1,005
단독주택	2,631,094	19,153
총합계	5,705,426	20,158

### 제3절 당진시 주거지와 축사 간 공간적 분포특성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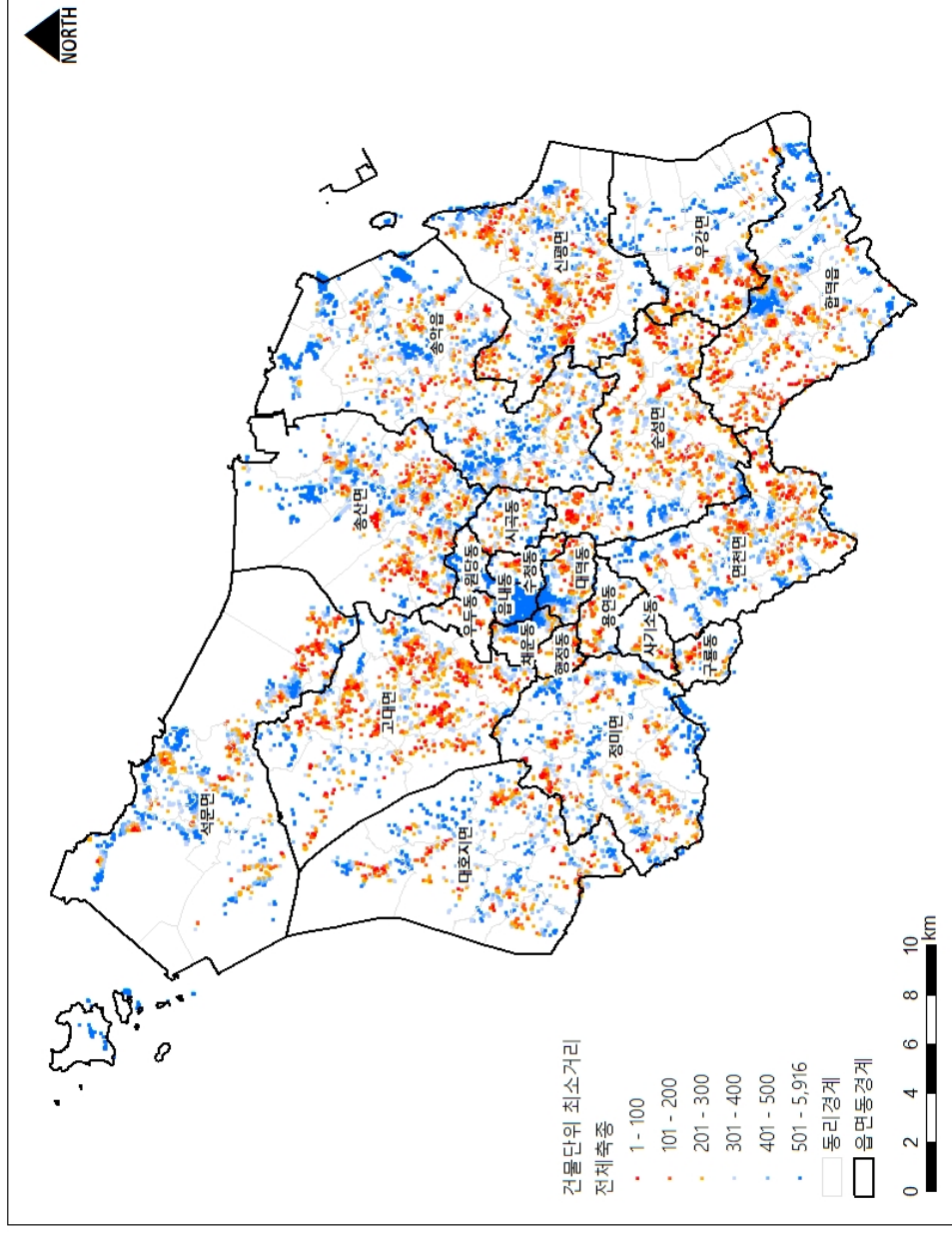
- 주거지와 축사 간 지리적 거리는 축사로부터의 악취 및 오·폐수 방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
- 따라서 두 유형의 토지이용 간 거리를 중심으로 공간적 분포특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축사로부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주거지의 비중이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에서는 모든 주거지(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심점과 축사 중심점 간 지리적 직선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축사로부터의 영향권 내 주거지의 분포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아래 그림은 축사와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를 기준으로 악취 등의 영향권이 설정되는 방식을 개념적으로 예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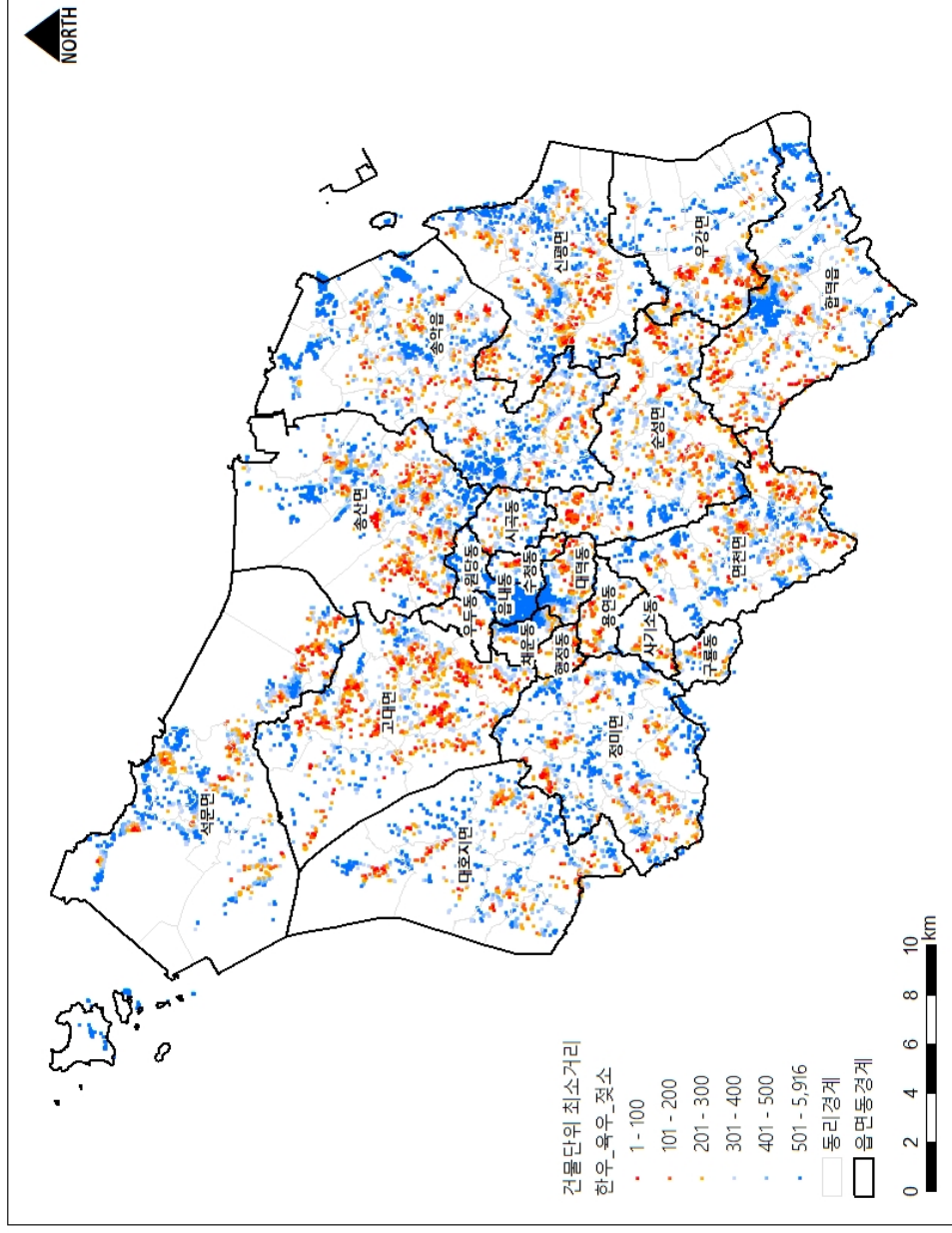
[그림 4-9] 축사와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 기준 영향권의 개념

- 주거용 건물1로부터 축사1과 축사2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축사1까지의 거리가 최소거리임을 알 수 있음
- 주거용 건물1은 축사2로부터 악취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축사1로부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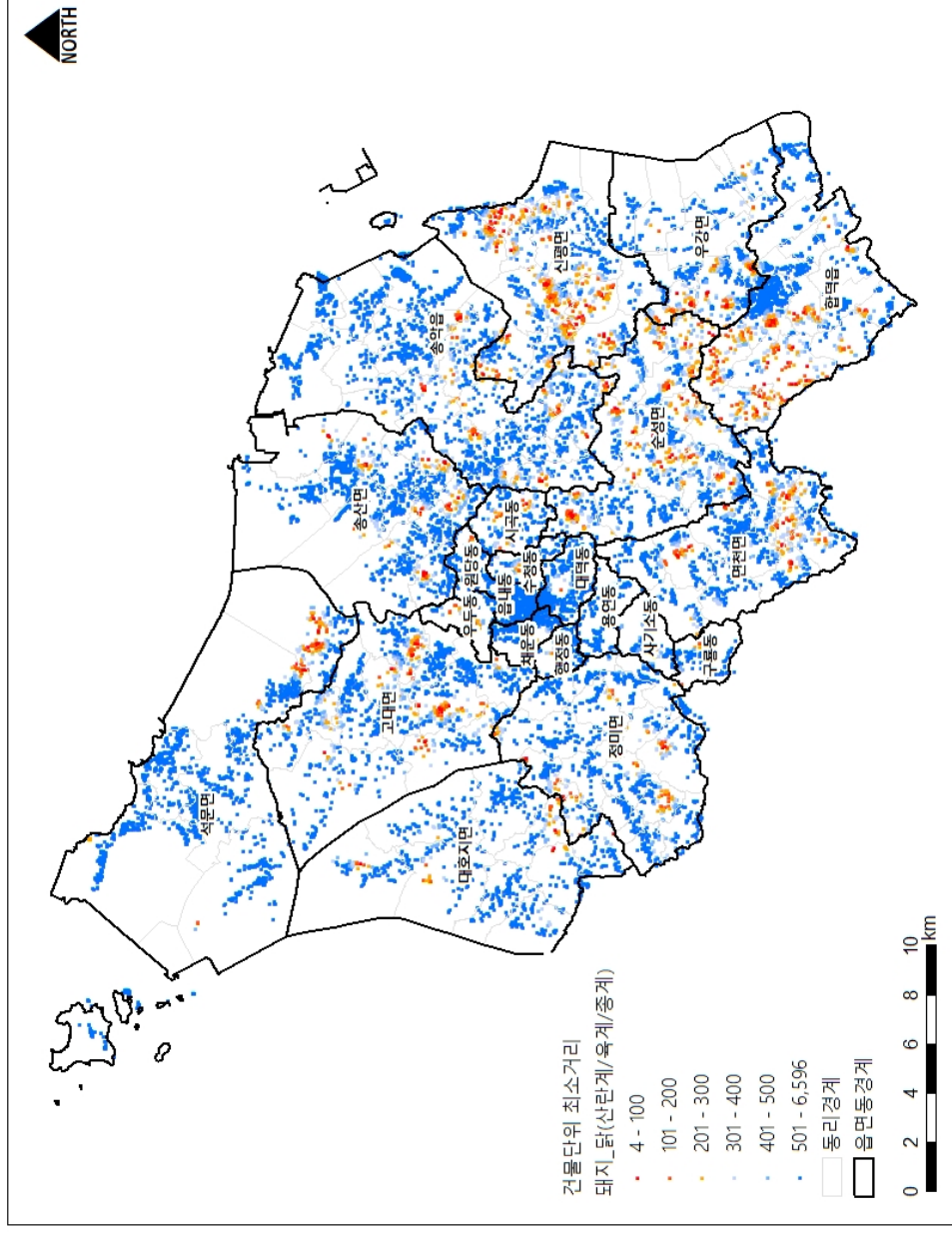
-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주거용 건물1은 축사1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모든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축사까지의 거리가 즉, 주거지로부터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축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단계구분도로 나타내면 어느 지역이 축사로부터 악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일차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그림 4-10]은 주거용 건물 단위로 가장 가까운 전체 축종 축사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뒤 이를 거리 증가에 따른 단계구분도로 표시한 결과임
- [그림 4-10]에서 파란색 톤이 진할수록 가장 가까운 축사까지의 거리가 먼 주거지를 나타내고, 반대로 빨간색 톤이 진할수록 가장 가까운 축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을 나타냄
- 파란색 톤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부분 중앙에 있는 동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동 지역에서 거리가 먼 리 지역일수록 가장 가까운 축사까지의 거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의 경우 축사에 의한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리 지역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축사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민원피해의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그림 4-11]과 [그림 4-12]는 각각 한우/육우/젖소와 돼지/닭(산란계\_육계\_종계) 축사까지의 최소거리 분포를 나타냄
- 한우/육우/젖소 축사까지의 최소거리는 모든 축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돼지/닭의 경우 도심(동) 지역으로부터 외곽으로 다소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축사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주거용 건물로부터 축사까지의 최소거리의 공간적 분포 : 전체 축종



[그림 4-11] 주기용 건물로부터 측시까지의 최소거리의 공간적 분포 : 한양/유아/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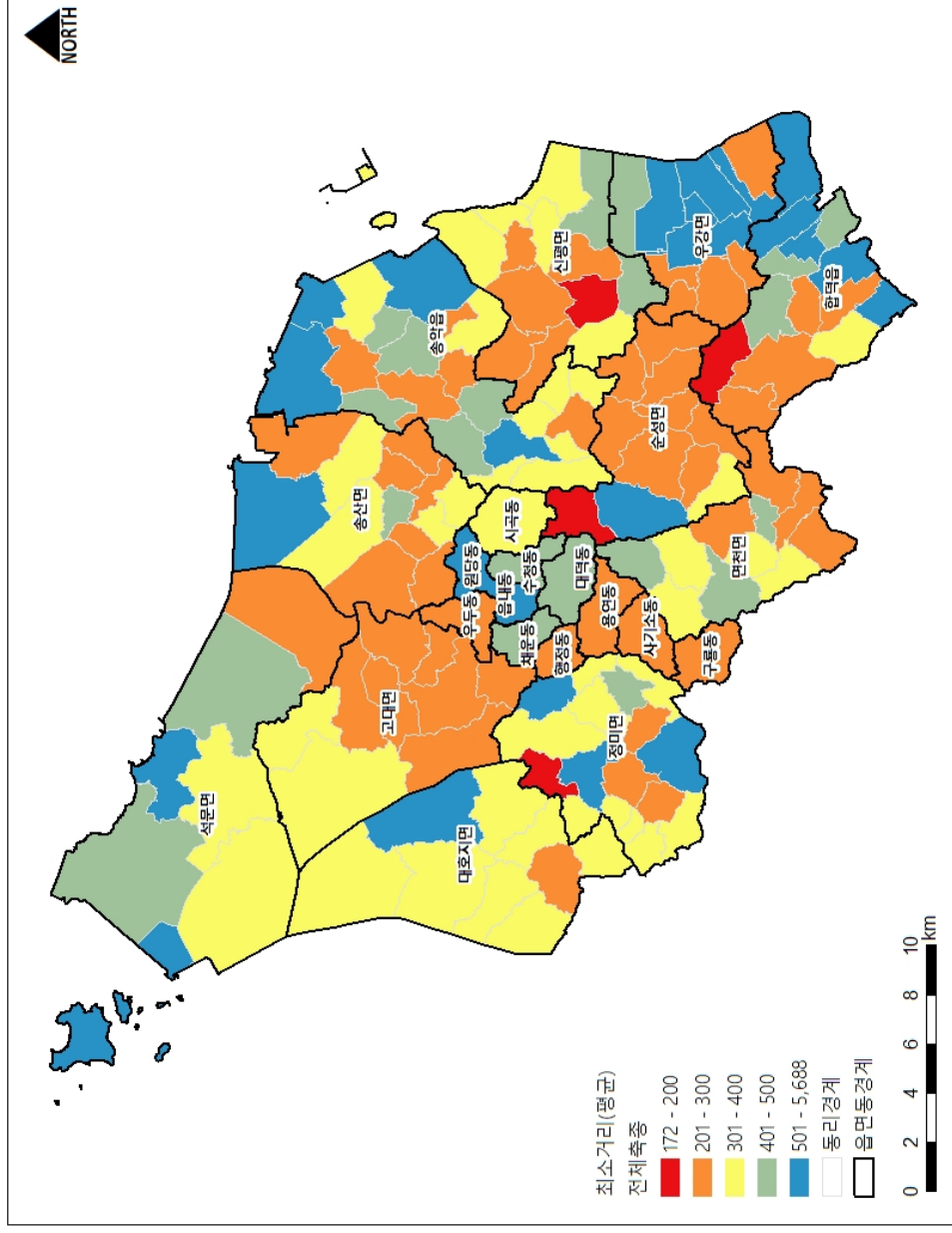


[그림 4-12] 주거용 건물로부터 측시까지의 최소거리의 공간적 분포 : 예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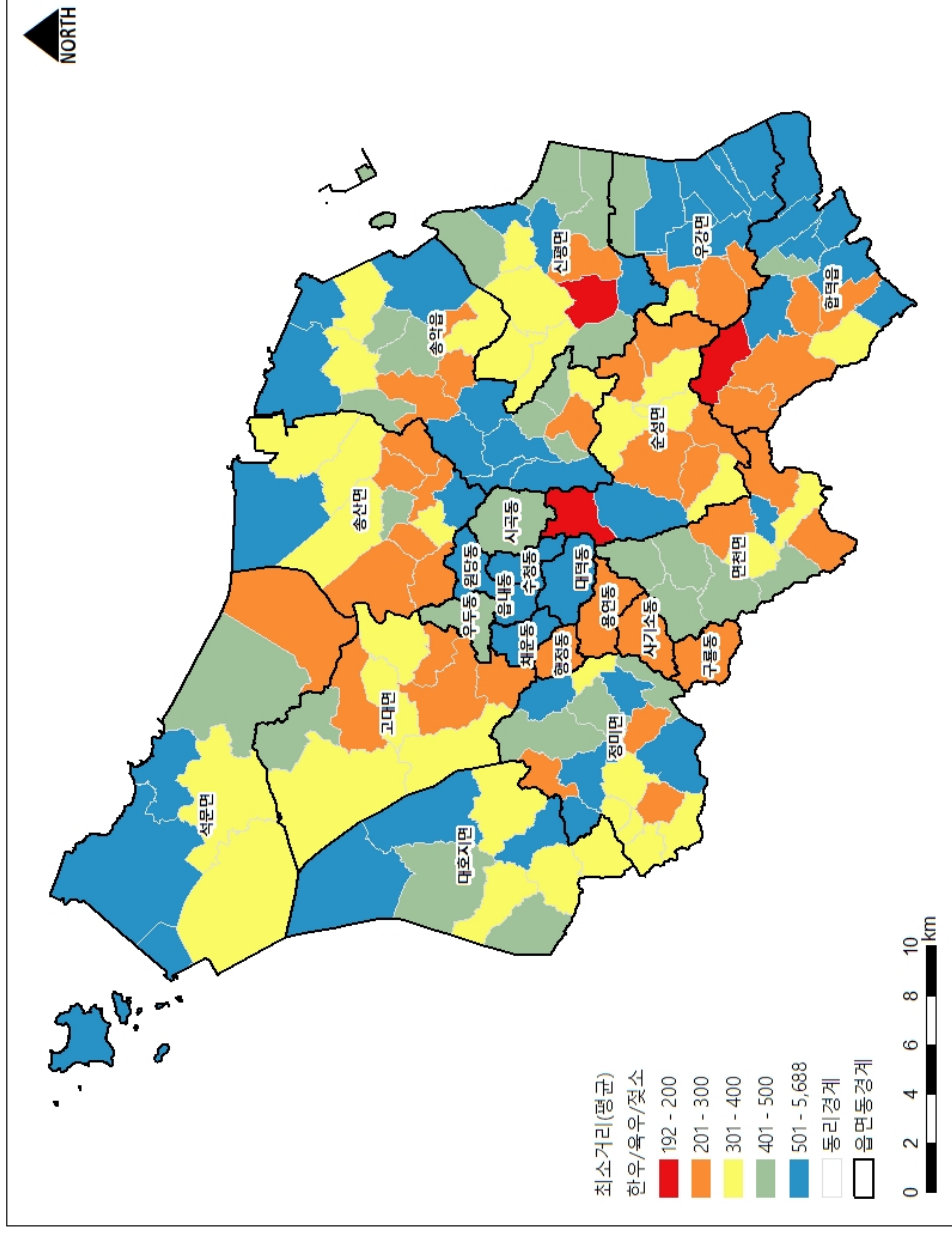
- [그림 4-13]은 주거지로부터 전체 축종 축사까지의 최소거리를 동·리 단위 평균값으로 집계한 결과를 나타냄. 즉, [그림 4-10]의 주거지 건물들의 최소 거리를 건물이 위치한 동·리 단위가 같은 건물들끼리 묶어서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임
- 마찬가지로 [그림 4-14]와 [그림 4-15] 역시 각각 한우/육우/젖소와 돼지/닭 축사까지의 최소거리 평균값을 동·리 단위로 집계한 결과를 나타냄
- [그림 4-13]을 보면 전체 축사의 경우 신평면, 순성면, 우강면, 합덕읍, 고대면 등을 중심으로 평균 최소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음
- 특히 순성면, 합덕읍, 정미면 일부 지역의 경우 축사까지의 평균 최소거리가 200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 한우, 육우, 젖소 축사의 경우 전체 축종의 동·리 단위 최소거리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돼지/닭의 경우 합덕읍 및 우강면과 신평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최소거리가 300m 이내로 나타남. 해당 축종의 경우 당진시 남동쪽 지역에 편중되어 주거지까지의 최소거리가 가까워 해당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그림 4-16]은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를 동·리 단위로 집계한 결과를 나타냄.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가 작을수록 주거지 밀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임<sup>3)</sup>. 만일 주거지 밀도도 높으면서 축사까지의 거리 역시 가까울 경우 해당 지역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반추해볼 수 있음
- [그림 4-17]은 주거지 밀도가 높고 축사까지 거리가 가까운 동·리 단위 지역의 분포를 단계구분도로 나타낸 것임. 그림에서 주거지 건물 간 거리가 100m 이내이면서 최소거리가 120m 이내인 주거용 건물(검은색 테두리의 원으로 표시됨)만을 추출하여 동·리 단위로 집계한 결과임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역은 당진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들 지역의 최소거리 패턴을 제한구역 설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최소거리 조건에서 주거지 밀도가 훨씬 높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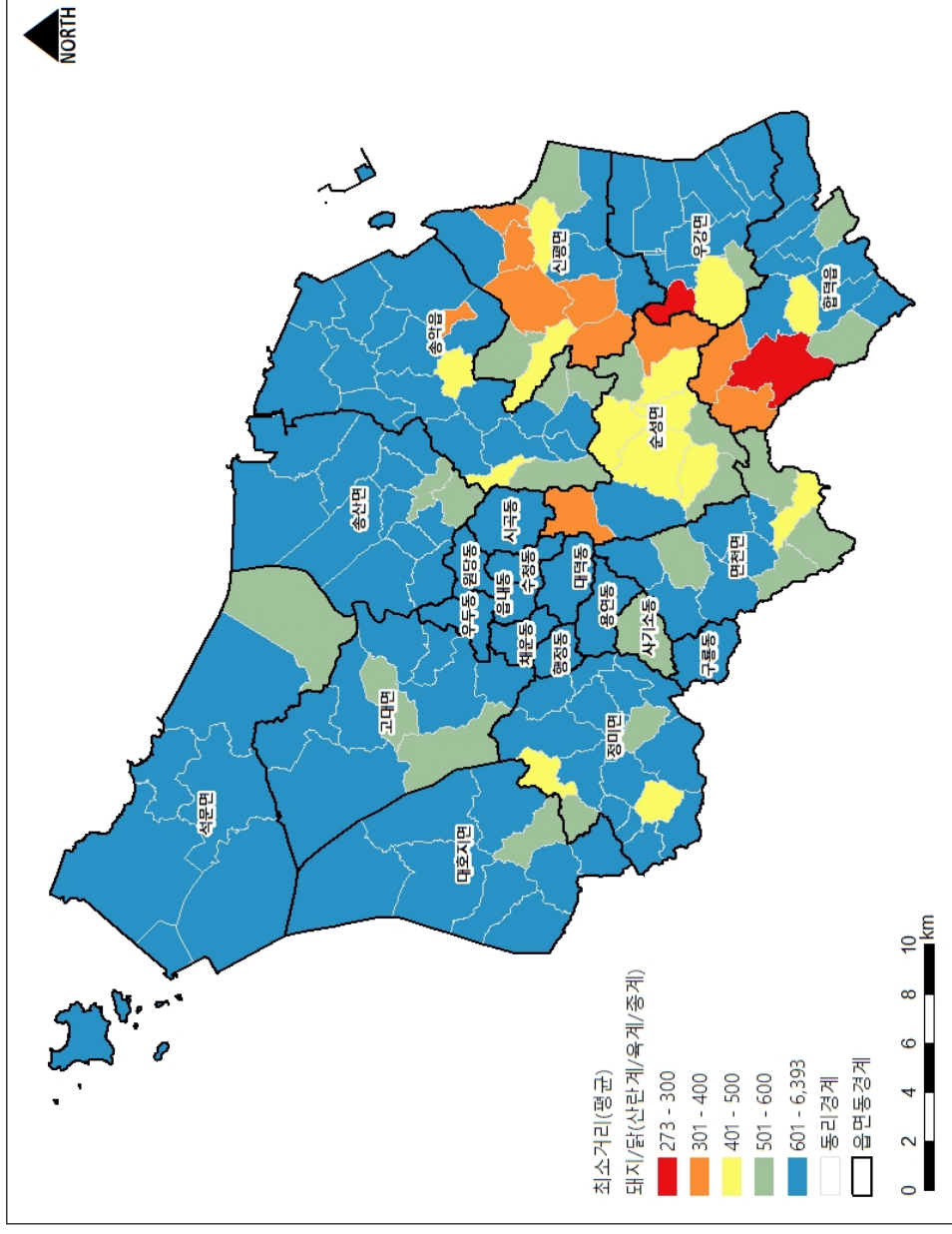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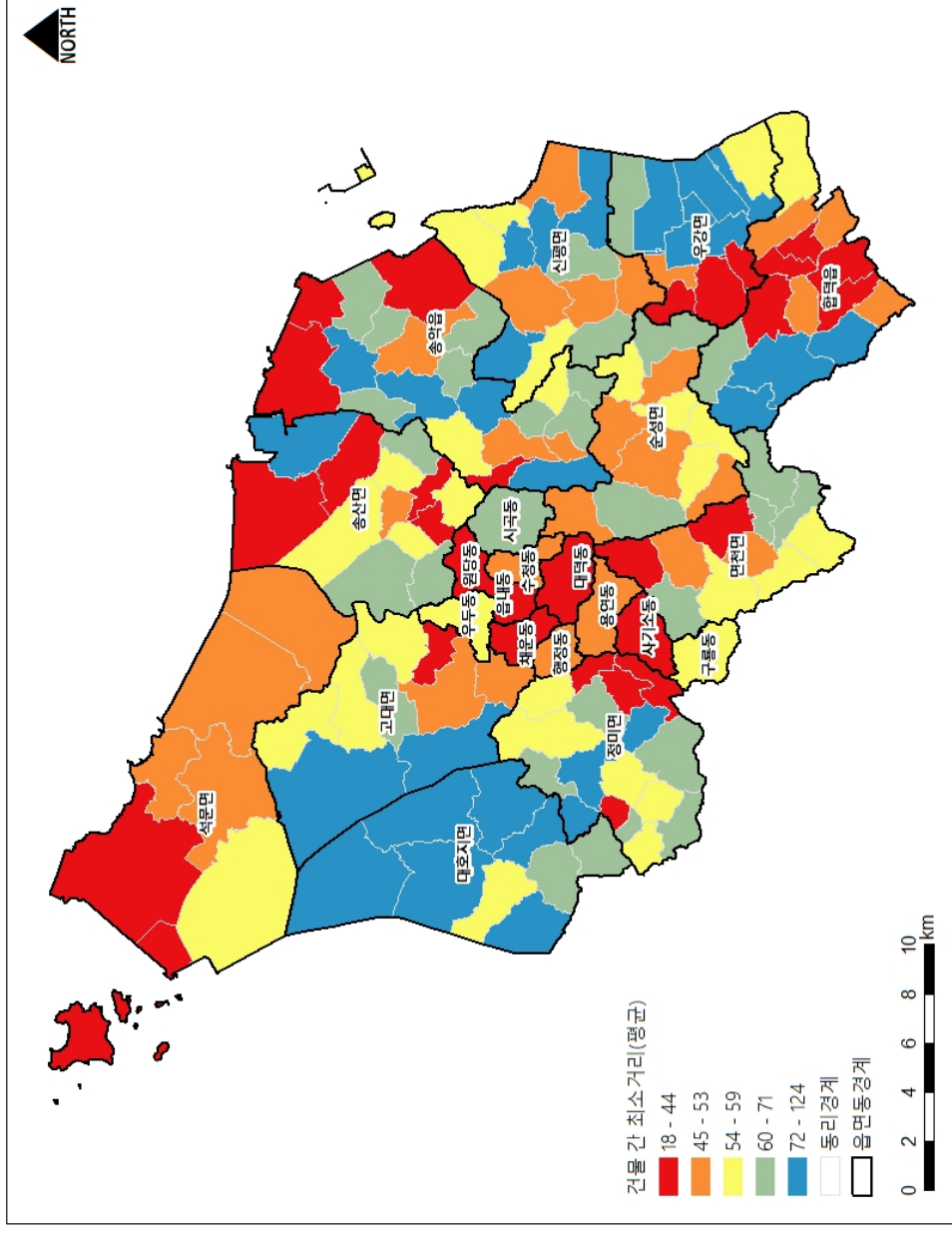
[그림 4-13] 동·리 단위 최상위 행정구분별 인구집중률과 전체인구집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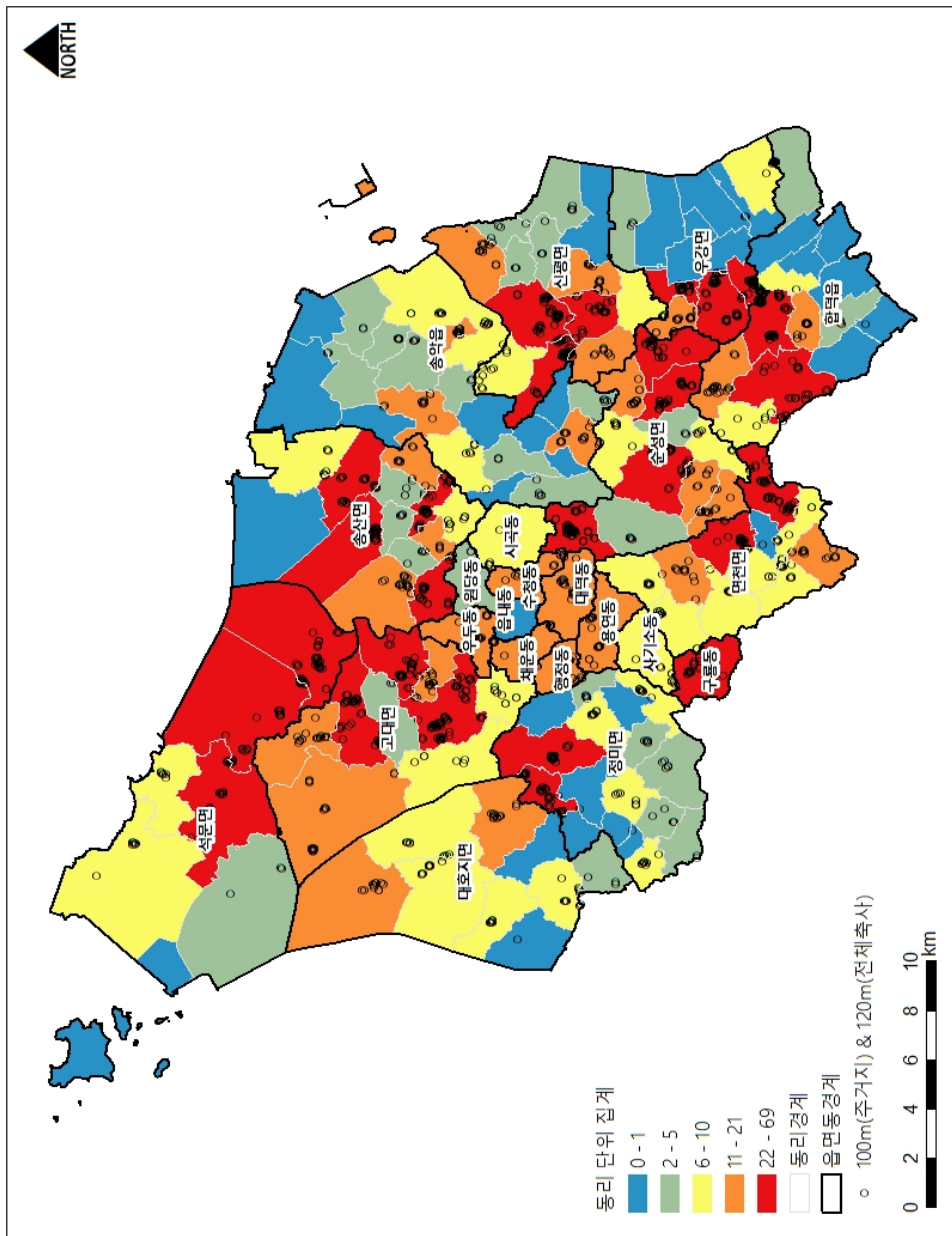
[그림 4-14] 동·리 단위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 한우/육우/젖소



[그림 4-15] 동·리 단위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 돼지/닭



[그림 4-16] 동·리 단위 주거용 건물 간 최소거리 집계결과



[그림 4-17] 동·리 단위 주거지 밀도와 축사 최소거리 중첩분석 결과

- 모든 주거지 건물을 대상으로 가장 가까운 축사까지의 거리 즉, 최소거리 정보를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거리 증가에 따른 악취 등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음
- 모든 주거지 건물의 최소거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 거리 증가에 따른 전체 주거지 건물 대비 해당 거리(권역)에 포함되는 주거지 건물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주거지와 축사 간 악취 등의 외부효과와 관련된 공간적 분포특성을 실증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전체 주거지 건물의 5%를 포함하는 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95%를 포함하는 거리에 이르기까지 5% 단위로 포함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음
- 아래 [표 4-4]는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 증가에 따른 임계거리<sup>4)</sup>의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으로 전체 축종, 한우/육우/젖소, 돼지/닭, 기타의 네 가지 축사유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음
- 예를 들어 전체 축종의 경우 임계거리 120m에 이르면 전체 주거용 건물의 10%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전체 주거용 건물 대비 모든 축사로부터 12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용 건물의 비중이 10%임을 의미함
- [표 4-4]의 임계거리 변화추이를 [표 4-5]에 정리된 그래프로 나타내었음. 각 그래프만으로는 축종별 변화추이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표 4-6]의 상단 그래프와 같이 종합하였음
-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에 따른 임계거리 증가 양상의 전반적 형태는 비슷하지만, 한우/육우/젖소의 경우 돼지/닭이나 기타 축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돼지/닭의 경우 인구의 80%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85%에 이르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을 알 수 있음
- 기타 축종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이 같은 조건에서 다른 축종보다 임계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남
- [표 4-5]의 아래 그림은 축종별 최소거리의 통계적 분포특성을 시각화한 것으로 전체 축종과 한우/육우/젖소의 최소거리 분포양상이 유사하지만, 돼지/닭의 경우 같은 비율 조건에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 기타 축종은 최소거리 간 편차가 타 축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기타 축종의 축사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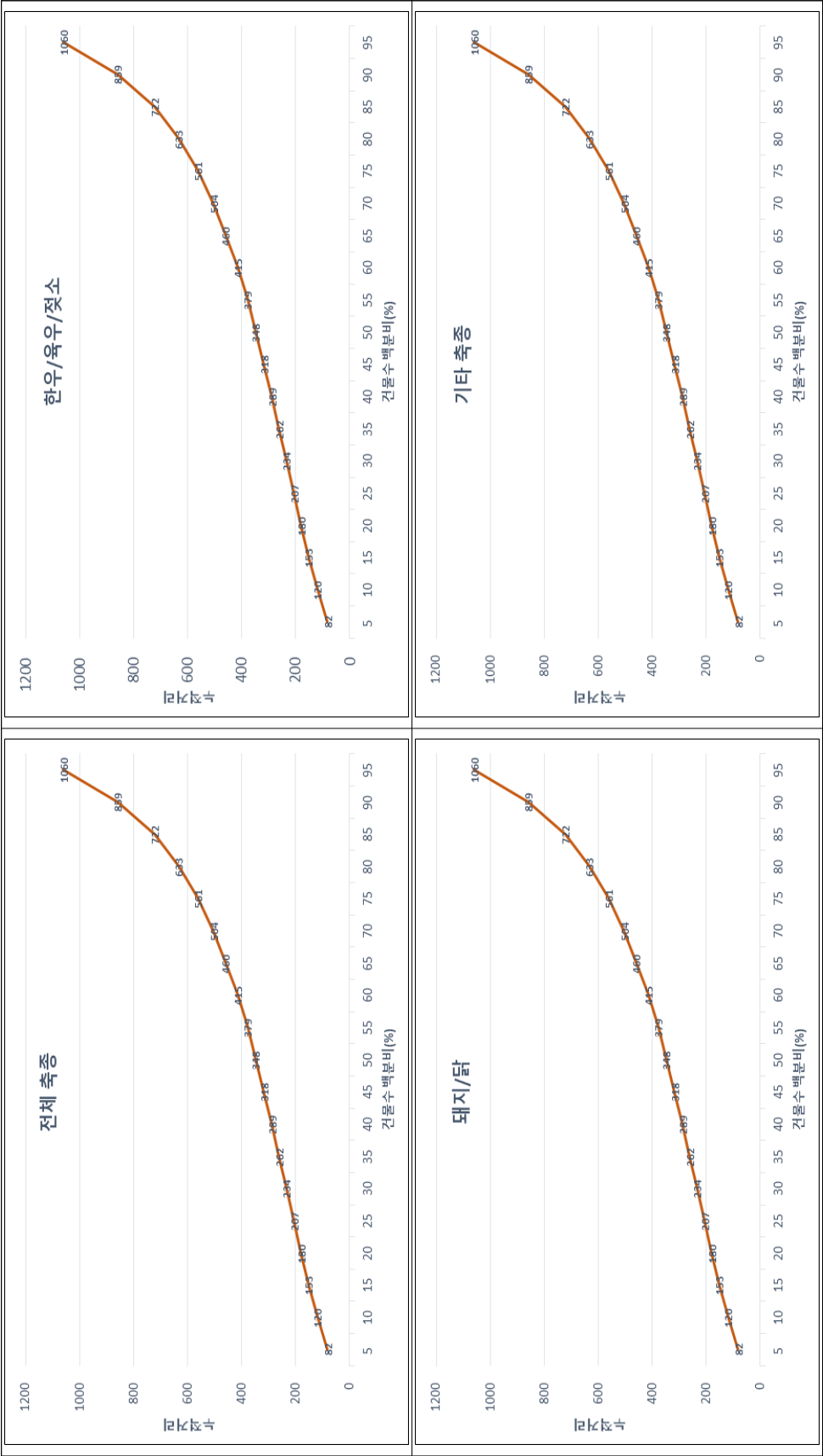
4) 본 분석의 맥락에서 임계거리는 모든 축사로부터 주거용 건물의 일정 비중(예: 10%)을 포함하는 최소거리를 의미함

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결과임

[표 4-4]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 증가에 따른 최소거리의 변화추이 :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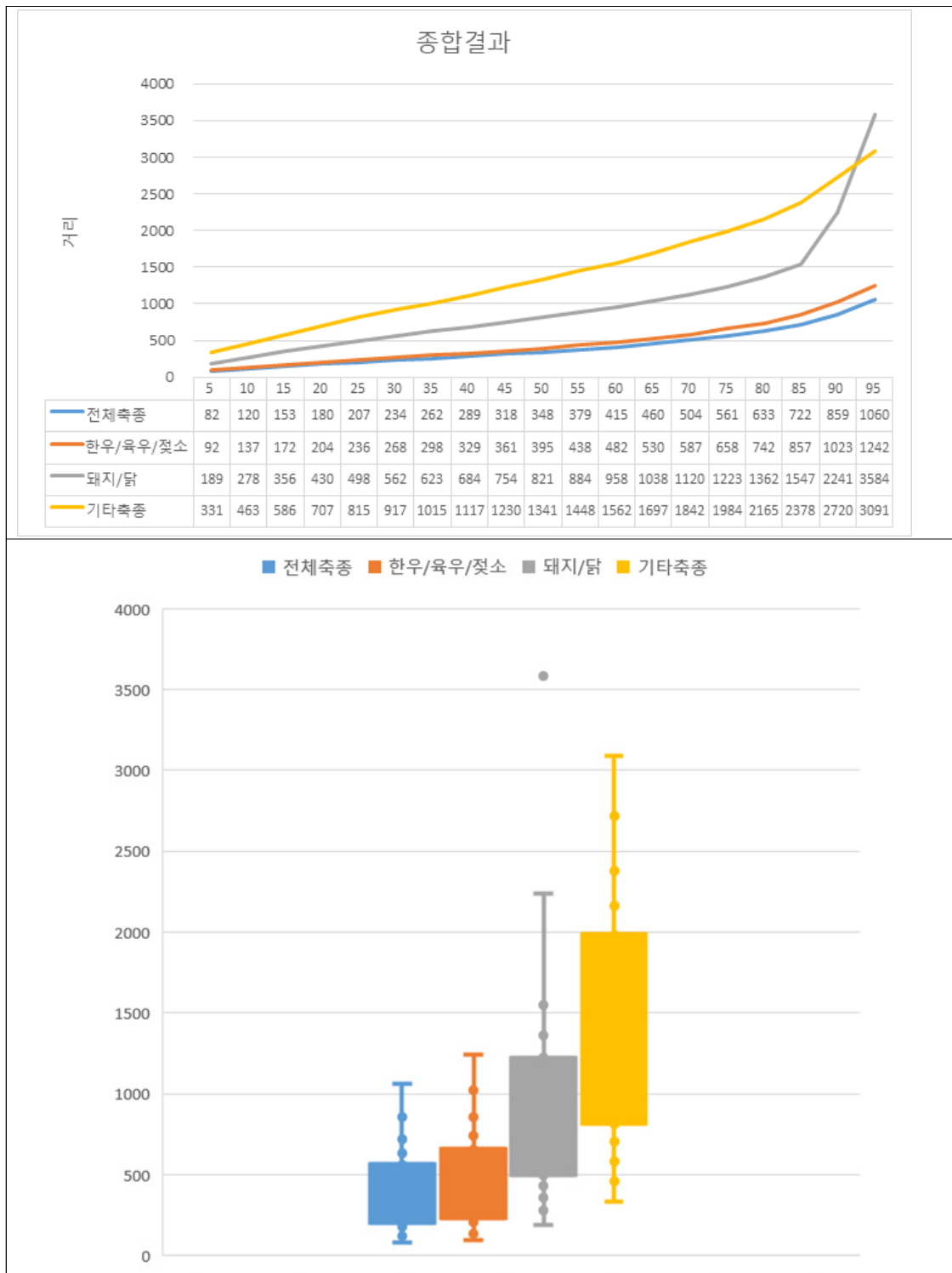
건물수 백분비(%)	누적거리(미터)			
	전체 축종	한우/육우/젖소	돼지/닭	기타축종
5	82	92	189	331
10	120	137	278	463
15	153	172	356	586
20	180	204	430	707
25	207	236	498	815
30	234	268	562	917
35	262	298	623	1,015
40	289	329	684	1,117
45	318	361	754	1,230
50	348	395	821	1,341
55	379	438	884	1,448
60	415	482	958	1,562
65	460	530	1,038	1,697
70	504	587	1,120	1,842
75	561	658	1,223	1,984
80	633	742	1,362	2,165
85	722	857	1,547	2,378
90	859	1,023	2,241	2,720
95	1,060	1,242	3,584	3,091
100	5,916	5,916	6,596	10,368

[표 4-5] 주거용 건물 포함비용 증가에 따른 최소거리의 변화추이 : 그래프





[표 4-6] 주거용 건물 포함비율 증가에 따른 최소거리의 변화추이 : 종합



- [표 4-7]은 주거지 유형별 축종별 축사까지의 최소거리 평균의 집계결과를 나타냄

- 공동주택의 경우 한우/육우/젖소의 경우 평균 622m로 집계되었고, 돼지/닭의 경우는 이보다 큰 1,067m로 산출되었음. 기타 축종의 경우는 한우/육우/젖소의 약 2배 가까운 거리로 주거지와 이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독주택의 경우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한우/육우/젖소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해당 축종의 축사까지의 평균거리가 다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음

[표 4-7] 주거지 유형별 축종별 축사까지의 최소거리 평균 집계결과

주거지 유형	전체 축종	한우/육우/젖소	돼지/닭	기타 축종
공동주택	543	622	1,067	1,242
단독주택	435	504	1,092	1,502
총합계	440	510	1,091	1,489

- 아래 표 [4-8]은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 공동주택)로부터 축종별 최소거리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나타냄. 이 역시 전체 축종 및 한우/육우/젖소는 유사한 요약 통계량을 보이나, 돼지/닭 및 기타 축종의 경우는 한우/육우/젖소 축종보다 이격거리가 대폭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표 4-8] 축종별 최소거리 요약 통계량

축종 유형	최소거리(미터)					
	최솟값	1사분위수	중앙값	평균	3사분위수	최댓값
전체 축종	1	207	348	440	561	5,916
한우/육우/젖소	1	236	395	510	658	5,916
돼지/닭	4	498	821	1,091	1,223	6,596
기타 축종	7	815	1,341	1,490	1,984	10,368

## 제4절 소결

■ 지금까지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용 건물과의 최소거리를 이용하여 축사의 악취 및 오·폐수 등 부정적 외부효과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거리가 어떠한 변화추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 보았음

- 주거용 건물의 포함비율 증가에 따라 한우/육우/젖소의 영향권이 돼지/닭의 경우에 비교하여 영향권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음
- 기타 축종의 경우는 축사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건물 포함 비중이 같으면 영향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요컨대, 축사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신규축사 입지를 규제하는 경우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권고하는 제한구역 설정 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당진시의 현황과 괴리가 있음

- 이는 비단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따라서 지역별 실증적 분석정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제한구역 설정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 건물 간 거리가 작을수록 주변 가까이에 다른 건물이 있음을 전제로 일종의 주거밀도 지표로 활용하였음

- 주거용 건물 간 거리가 작은 값을 가지는 건물들이 축사까지 거리 역시 가까울 경우 악취 및 오·폐수 배출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 및 민원 발생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물들을 찾아내어 동·리 단위 단계구분도로 작성한 결과 당진시 전 지역에 걸쳐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당진시 전체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구밀도도 높고 축사까지의 최소거리도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규제를 다소 완화할 여지는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5장

##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2. 정책제언 : 조례 수정안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논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축산농가들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라는 양면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함

- 현재 당진시는 지역의 98.66%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축산업이 위축되고 위법축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환경과 축산업이 공존하는 형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 설정을 위주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보다도 강화된 형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 차원에서 설정된 측면이 있으나, 당진시 축산업이 환경과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을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과의 최소거리를 이용한 결과 일률적인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강화 및 완화 검토가 필요

- 당진시 가축사육 현황을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과의 최소거리를 이용하여 축사의 악취 및 오·폐수 등 부정적 외부효과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는 비중을 증가시켜 감에 따라 임계거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당진시의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 가능성, 민원 발생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당진시 전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거리 설정보다는 인구밀도가 높고 축사까지의 최소 거리가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완화 조항 설정 필요

- 축사가 노후화되어 현대화시설을 하려는 경우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과정, 축산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해 주거밀집지역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이유로 이전하려는 경우 등에는 축사의 규모와 횡수, 증축 비율 등을 조건으로 제한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농축산업의 후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인력 양성의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축산의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자원화를 위한 스마트축산단지 등 국가 조성 단지 및 축산 관련 연구 시설에서의 사양실험을 위한 사육의 경우 등 공공의 목적의 경우는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거밀집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및 관계자, 전문가 등에 의한 지역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관련 환경영향 평가 및 지역의 동의 등을 전제로 하여 축사의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하여 완화 조항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제2절 정책 제언: 조례 수정안

### ■ 민관 거버넌스 구축: 행정 및 민간의 협력

- 당진시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지역 차원에서 축산문제에 대응해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적으로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축산지원과를 비롯하여 환경과, 허가과 등에서 지역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는 가축사육농가와 지역 주민, 지역의 민간단체나 중간 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소통 구조 및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및 당진시의 축산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도 정기적인 논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 조례 수정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당진시에서 축산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여기에는 축산 사육농가를 포함하여 축산업 관계자 역시 지역의 주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해 가는 구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 축산업 미래 인력 확보)** 농촌 과소화 및 농업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 농축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신규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입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적정 규모에 대한 전제는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 축산업 보호)** 외부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형 대규모 축산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의 생계형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불가 방침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지켜내고 지역의 축산업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임
- **(환경친화적 지역 축산업 구축)**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현대화사업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천연미생물 활용 등 선진 기술이 활용되는 환경친화적 노력이 지역 축산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독려해나가야 할 것임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축사 신축 및 이전, 개축, 증축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마을자치규약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조례 수정 세부안

- 타 지역 조례를 참고로 하여 신축, 증축, 이전 사항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마련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외부지역으로부터의 기업형 대규모 축사는 불허한다’ 는 절대 불가한 상황에 대한 규제 강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예외 조항에 추가할 사항(안)
  - － 신규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개시한 경우(영농규모 제한 있음)
  - － 스마트자원화를 위한 스마트축산단지 등 국가단지 조성
  - － 위생과 방음, 탈취 등을 갖춘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국공립 및 사설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시설
- \* 비슷한 조항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 추가 검토 필요
- 주거밀집지역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지원과 및 환경과, 허가과 등 관련 과가 함께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실제 지역 실태 조사를 통해 신축 및 이전에 대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대호호 주변의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국가·하천) 경계로부터 300m’ 에 대한 거리 설정과 관련하여 주거밀집지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하천의 주변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 검토되어야 함
  - － 축종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환경부하를 주지 않는 소규모 생계형 한우 축산 농가에 대해서만이라도 거리 설정에 대한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 이 경우에도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한 준수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하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외에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지역의 동의,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강마야, 한승석(2018), 홍성군 서부지역 축사 밀집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환경부(201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
- 환경부(2015),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 〈통계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당진시 통계연보
- 충남 통계연보

###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https://uni.agrix.go.kr>)
-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www.djnch.nonghyup.com](http://www.djnch.nonghyup.com))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 〈법률 및 조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조례

### 〈일본 관련 자료〉

- 家畜排せつ物の管理の適正化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가축분뇨의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본 농림수산업성
-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 부 록

---

1. 동·리 단위 축종별 최소거리 및 건물  
간 최소거리 분석결과
2. 동·리 단위 및 축종별 축사 특성(동수/  
사육두수/축사면적) 집계
3. 당진시 제한구역 현황
4.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
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당진시 담당자 및 현장 면담



## 부록 1. 동·리 단위 축종별 최소거리 및 건물 간 최소거리 분석결과

동리	전체 축종	한우/육우/젖소	돼지/닭	기타 축종	건물 간 최소거리
고대면 당진포리	351	376	928	1,264	87
고대면 대촌리	286	309	518	862	68
고대면 삼봉리	360	379	3,974	985	47
고대면 성산리	362	403	622	1,904	57
고대면 장항리	228	229	945	1,015	57
고대면 초락도리	388	392	2,441	2,775	57
고대면 통정리	403	413	1,058	2,736	47
구룡동	236	278	762	689	56
구룡동 대운산리	332	476	692	588	36
대덕동	494	515	870	2,036	28
대호지면 도이리	623	726	958	1,317	86
대호지면 사성리	347	437	860	1,033	72
대호지면 적서리	390	515	717	2,933	72
대호지면 조금리	388	391	1,775	1,355	54
대호지면 출포리	352	418	939	761	73
면천면 갈산리	189	199	364	2,048	51
면천면 대치리	379	401	576	1,030	54
면천면 사기소리	382	488	644	868	60
면천면 삼웅리	423	425	913	1,029	54
면천면 성상리	262	289	727	527	41
면천면 성하리	350	400	635	488	50
면천면 송학리	330	417	593	664	48
면천면 양유리	316	386	547	1,586	50
면천면 원동리	470	507	630	970	59
면천면 율사리	225	237	535	1,512	57
면천면 자개리	227	344	445	850	60
면천면 죽동리	448	448	969	1,677	42
사기소동	274	291	546	1,211	43
석문면 교로리	472	562	2,045	2,016	41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석문면 난지도리	5,688	5,688	6,393	9,703	37
석문면 장고항리	521	558	3,998	1,330	46
송산면 가곡리	863	873	2,537	1,729	40
송산면 금암리	259	286	708	2,170	61
송산면 당산리	252	252	860	2,976	68
송산면 도문리	299	299	1,013	1,847	58
송산면 무수리	314	341	756	1,186	56
송산면 삼월리	402	402	963	2,258	49
송산면 삼화리	277	295	571	2,737	52
송산면 송석리	235	235	910	2,545	58
송산면 슬항리	300	344	681	701	56
송악읍 가학리	446	677	792	1,019	53
송악읍 고대리	781	827	3,157	1,469	33
송악읍 도원리	212	260	301	485	44
송악읍 동곡리	285	301	796	2,178	103
송악읍 명산리	276	292	927	1,766	64
송악읍 반촌리	598	632	1,072	1,203	45
송악읍 부곡리	334	334	3,661	1,997	63
송악읍 상거리	217	236	596	1,264	37
송악읍 석포리	230	246	746	1,895	87
송악읍 오곡리	433	433	2,549	2,121	60
송악읍 월곡리	276	368	2,650	583	105
송악읍 유곡리	346	374	883	1,522	40
송악읍 정곡리	409	454	826	1,863	68
송악읍 중흥리	486	494	1,379	1,823	51
송악읍 한진리	669	1,043	5,170	693	29
수청동	481	578	755	1,091	45
순성면 가교리	344	545	591	751	77
순성면 방계리	316	461	991	690	50
순성면 백석리	250	281	471	1,352	55
순성면 본당리	224	241	662	1,144	62
순성면 봉소리	217	244	452	591	53



순성면 상오리	343	403	393	2,610	63
순성면 성북리	503	591	1,121	1,285	61
순성면 아찬리	227	237	544	2,873	54
순성면 옥호리	283	344	474	1,157	52
순성면 청금리	303	344	561	2,479	63
시곡동	356	411	623	1,023	59
시곡동 기지시리	355	596	472	475	34
시곡동 부곡리	355	688	518	574	56
신평면 거산리	241	315	405	1,735	55
신평면 광명리	396	423	841	2,066	63
신평면 금곡리	240	255	499	794	67
신평면 금천리	247	383	380	703	47
신평면 남산리	172	192	309	1,320	49
신평면 도성리	344	557	433	912	77
신평면 매산리	389	450	620	826	54
신평면 복운리	811	811	2,531	2,447	37
신평면 봉교리	330	405	510	2,530	59
신평면 부수리	350	746	389	930	56
신평면 영천리	465	529	699	1,071	124
신평면 운정리	398	440	569	2,087	47
신평면 전대리	360	386	683	1,341	62
신평면 초대리	300	339	537	1,375	86
신평면 한정리	257	301	374	553	82
용연동	254	257	1,236	1,667	50
용연동 모평리	333	333	1,103	1,519	34
우강면 강문리	1,392	1,392	1,693	2,683	94
우강면 공포리	504	504	870	1,374	93
우강면 부장리	471	471	1,422	3,511	71
우강면 세류리	218	325	281	2,216	44
우강면 소반리	989	1,010	1,036	2,391	77
우강면 신당리	477	477	1,315	2,049	75
우강면 신송리	496	540	681	2,649	46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우강면 신촌리	662	832	768	3,295	111
우강면 신흥리	253	278	655	1,915	59
우강면 원치리	203	220	692	1,279	44
우두동	253	424	739	719	55
우두동 용두리	256	256	1,003	1,221	40
우두동 진관리	204	216	768	1,786	50
원당동	605	700	1,031	1,059	38
원당동 매곡리	308	309	784	1,589	39
읍내동	982	1,162	1,211	1,279	18
정미면 대조리	379	664	552	921	74
정미면 덕마리	465	691	619	762	40
정미면 덕삼리	359	375	1,018	3,178	64
정미면 도산리	500	844	1,025	556	80
정미면 두산리	318	348	1,301	851	75
정미면 마중리	368	382	923	2,488	67
정미면 매방리	296	392	745	567	59
정미면 봉생리	580	600	1,166	1,972	53
정미면 봉성리	246	258	423	1,747	59
정미면 사관리	246	263	521	1,917	77
정미면 산성리	348	369	669	3,055	58
정미면 송전리	278	318	961	2,355	64
정미면 수당리	709	719	822	2,300	71
정미면 송산리	177	265	465	800	63
정미면 신시리	364	452	885	1,821	61
정미면 옥현리	281	306	594	1,738	77
정미면 우산리	346	346	1,140	1,466	38
정미면 장정리	390	704	508	1,534	84
정미면 천의리	374	414	1,205	1,019	58
정미면 하성리	379	379	816	2,120	60
정미면 항곡리	261	269	701	2,196	49
채운동	489	528	835	1,253	30
합덕읍 광천리	269	320	413	980	55

합덕읍 나산리	220	225	511	1,008	53
합덕읍 내경리	288	815	904	622	56
합덕읍 대전리	331	357	543	1,198	82
합덕읍 대포리	523	541	744	1,780	93
합덕읍 대합덕리	281	284	781	1,378	40
합덕읍 도곡리	204	289	307	1,767	79
합덕읍 도리	820	820	1,097	1,970	24
합덕읍 문봉리	218	231	565	1,448	61
합덕읍 본리	275	319	488	2,304	47
합덕읍 석우리	206	272	273	921	80
합덕읍 성동리	244	279	412	592	45
합덕읍 성원리	658	665	1,108	1,748	87
합덕읍 소소리	184	192	306	1,584	67
합덕읍 송산리	245	252	474	769	33
합덕읍 신리	523	607	838	2,819	46
합덕읍 신석리	511	528	760	2,776	42
합덕읍 신흥리	876	1,670	1,997	1,037	54
합덕읍 옥금리	494	528	595	3,088	50
합덕읍 운산리	457	569	865	785	23
합덕읍 점원리	538	538	1,116	2,254	52
합덕읍 중방리	206	243	317	2,822	69
합덕읍 창리	224	238	525	543	23
합덕읍 합덕리	405	405	1,234	765	34
행정동	213	230	725	583	46

## 부록 2. 동·리 단위 및 축종별 축사 특성(동수/사육두수/축사면적) 집계

동리명	전체 동수	총사육두수	전체 축사면적
고대면 당진포리	74	169,290	44,666
돼지	29	21,000	20,167
사슴	2	38	680
염소	1	50	286
육계	9	96,000	5,506
젖소	2	119	3,575
종계	7	51,700	8,033
한우	24	383	6,419
고대면 대촌리	36	63,247	13,064
돼지	14	4,000	4,140
사슴	1	5	194
육계	7	59,000	3,130
한우	14	242	5,600
고대면 삼봉리	21	404	7,191
사슴	1	2	30
산양	1	3	4
젖소	1	70	2,428
한우	18	329	4,729
고대면 성산리	38	120,792	15,941
육계	7	120,000	6,600
한우	31	792	9,341
고대면 장항리	48	76,013	18,547
염소	1	33	366
육계	4	75,000	3,670
한우	43	980	14,511
고대면 초락도리	57	9,678	24,915
돼지	31	9,000	15,820
육우	1	3	50
한우	25	675	9,045

고대면 통정리	38	265,248	17,854
육계	21	265,000	14,921
한우	17	248	2,933
구룡동	16	25,749	4,921
염소	1	136	286
육계	1	150	35
종계	3	25,300	2,693
한우	11	163	1,907
구룡동 대운산리	9	29,816	4,483
돼지	1	300	647
염소	1	16	36
육계	3	12,000	600
종계	4	17,500	3,200
대덕동	27	1,833	7,826
돼지	3	1,400	1,879
한우	24	433	5,947
대호지면 도이리	17	8,432	10,330
돼지	12	8,400	8,699
젖소	3	16	979
한우	2	16	652
대호지면 사성리	26	86,630	7,626
산양	1	30	660
염소	1	32	78
육계	6	86,300	4,042
한우	18	268	2,846
대호지면 적서리	23	77,162	9,495
육계	3	60,000	3,294
젖소	4	72	1,225
종계	7	17,000	2,562
한우	9	90	2,414
대호지면 조금리	5	160	909
한우	5	160	909
대호지면 출포리	17	50,281	7,492
염소	3	20	49
육계	4	50,000	2,640
젖소	6	186	3,994
한우	4	75	809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면천면 갈산리	39	13,180	13,043
돼지	19	8,500	8,395
산란계	1	4,500	488
한우	19	180	4,160
면천면 대치리	8	20,064	2,231
육계	3	20,000	1,320
한우	5	64	911
면천면 사기소리	19	88,132	4,722
산란계	1	60,000	1,168
염소	2	40	265
육계	9	28,000	1,780
젖소	1	5	150
한우	6	87	1,359
면천면 삼웅리	14	1,409	3,855
돼지	3	1,250	1,399
한우	11	159	2,456
면천면 성상리	24	2,172	8,073
돼지	7	1,850	2,772
염소	1	30	93
육우	1	16	330
젖소	9	180	3,625
한우	6	96	1,253
면천면 성하리	12	62,031	4,362
산양	2	1	290
염소	1	10	101
육계	8	62,000	3,630
한우	1	20	341
면천면 송학리	25	41,121	5,209
돼지	3	970	1,019
염소	3	34	104
육계	6	40,000	2,202
젖소	3	40	911
한우	10	77	973
면천면 양유리	12	668	3,212
돼지	3	530	949
육우	2	10	583
젖소	2	60	594

한우	5	68	1,086
면천면 원동리	3	51	1,530
젓소	3	51	1,530
면천면 을사리	34	46,105	18,230
돼지	3	250	587
육계	4	45,000	2,145
육우	1	7	260
젓소	3	30	2,591
한우	23	818	12,647
면천면 자개리	43	86,369	19,688
돼지	4	473	1,337
염소	1	6	48
육계	5	85,036	2,800
젓소	20	305	9,228
한우	13	549	6,275
면천면 죽동리	1	50	556
한우	1	50	556
사기소동	31	99,087	10,306
육계	14	77,000	5,082
종계	5	22,000	3,837
한우	12	87	1,387
석문면 교로리	12	532	6,760
육계	1	230	87
젓소	2	102	2,476
한우	9	200	4,197
석문면 장고항리	7	437	1,126
산양	1	350	198
염소	1	8	5
한우	5	79	923
송산면 가곡리	3	48	522
한우	3	48	522
송산면 금암리	15	1,558	4,486
돼지	7	1,500	2,856
한우	8	58	1,630
송산면 당산리	24	1,639	9,785
돼지	3	1,000	1,800
한우	21	639	7,98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송산면 도문리	14	675	10,724
육우	2	1	396
젖소	4	104	3,390
한우	8	570	6,938
송산면 무수리	35	54,793	11,687
돼지	9	4,410	3,061
육계	5	50,000	2,970
한우	21	383	5,656
송산면 삼월리	2	38	1,375
젖소	2	38	1,375
송산면 삼화리	57	142,474	18,470
돼지	13	3,000	4,189
육계	17	139,000	7,220
젖소	2	60	1,733
한우	25	414	5,328
송산면 송석리	7	120	1,485
한우	7	120	1,485
송산면 슬항리	50	59,094	12,439
돼지	18	3,800	4,282
산양	2	27	125
육계	8	55,005	4,006
한우	22	262	4,026
송악읍 가학리	8	738	3,721
돼지	3	650	1,705
한우	5	88	2,016
송악읍 고대리	4	383	5,807
염소	2	35	252
젖소	1	90	1,180
한우	1	258	4,375
송악읍 도원리	11	1,381	3,524
돼지	6	1,300	2,164
사슴	1	2	39
한우	4	79	1,321
송악읍 동곡리	18	949	5,850
돼지	2	800	1,044
한우	16	149	4,806
송악읍 명산리	13	906	5,912



돼지	3	720	660
젓소	1	105	2,256
한우	9	81	2,996
송악읍 반촌리	1	11	131
한우	1	11	131
송악읍 부곡리	7	57	1,335
한우	7	57	1,335
송악읍 상거리	16	2,479	5,378
돼지	10	2,400	4,120
염소	1	19	75
한우	5	60	1,183
송악읍 석포리	31	2,293	10,046
돼지	8	1,600	2,044
한우	23	693	8,002
송악읍 오곡리	2	9	64
한우	2	9	64
송악읍 월곡리	16	367	3,866
사슴	1	2	50
산양	2	22	156
한우	13	343	3,660
송악읍 유곡리	21	90,053	10,643
염소	1	60	66
육계	5	45,000	1,750
종계	7	44,850	7,488
한우	8	143	1,339
송악읍 정곡리	12	43,250	6,550
종계	12	43,250	6,550
송악읍 중흥리	9	50	1,271
한우	9	50	1,271
송악읍 한진리	1	14	182
염소	1	14	182
수청동	12	1,782	2,508
돼지	4	1,700	1,469
사슴	2	13	160
한우	6	69	879
순성면 가교리	8	1,060	1,795
돼지	2	1,000	707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사슴	1	10	300
염소	1	5	91
한우	4	45	697
순성면 방계리	2	10	115
한우	2	10	115
순성면 백석리	32	67,788	15,983
돼지	6	500	2,391
산란계	2	15,000	1,345
종계	7	52,000	7,180
한우	17	288	5,067
순성면 본당리	30	3,873	8,140
돼지	15	3,500	3,200
사슴	1	15	328
육우	1	65	328
한우	13	293	4,284
순성면 봉소리	76	96,903	29,140
돼지	31	11,100	12,613
사슴	3	59	680
육계	3	60,000	2,584
젖소	9	171	5,640
종계	8	25,300	2,911
한우	22	273	4,712
순성면 상오리	34	55,459	14,194
돼지	23	5,346	7,127
육계	1	50,000	2,610
젖소	6	93	3,087
한우	4	20	1,370
순성면 성북리	12	190	3,220
염소	1	5	30
한우	11	185	3,190
순성면 아찬리	37	146,655	17,960
돼지	1	100	198
산란계	6	86,000	5,436
육계	7	60,020	4,861
한우	23	535	7,465
순성면 옥호리	35	6,474	12,098
돼지	19	6,170	7,317

육우	3	72	2,095
한우	13	232	2,686
순성면 청금리	15	70,114	9,871
산란계	10	70,000	8,639
한우	5	114	1,232
시곡동	25	160,175	11,600
사슴	1	4	144
육계	11	160,030	8,655
한우	13	141	2,801
시곡동 기지시리	7	1,015	1,787
돼지	5	1,000	1,551
사슴	1	9	36
염소	1	6	200
시곡동 부곡리	20	3,275	5,662
돼지	15	3,220	5,019
염소	4	45	503
한우	1	10	140
신평면 거산리	26	5,630	10,976
돼지	19	5,500	9,533
한우	7	130	1,443
신평면 광명리	4	120	1,957
젓소	3	74	957
한우	1	46	1,000
신평면 금곡리	17	2,017	5,917
돼지	8	1,800	2,199
사슴	1	25	287
젓소	1	60	1,107
한우	7	132	2,324
신평면 금천리	71	158,836	31,606
돼지	18	4,500	4,362
사슴	1	3	252
육계	11	115,000	6,316
육우	4	27	1,447
젓소	4	250	6,446
종계	10	38,500	6,573
한우	23	556	6,210
신평면 남산리	145	47,639	82,118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돼지	44	17,564	22,316
육계	3	27,000	1,485
육우	1	60	880
젓소	56	1,534	34,381
한우	41	1,481	23,056
신평면 도성리	9	1,807	2,650
돼지	7	1,800	2,499
사슴	1	1	25
한우	1	6	126
신평면 매산리	54	16,205	27,283
돼지	27	14,200	13,393
산란계	1	1,500	320
염소	2	40	231
젓소	13	323	9,305
한우	11	142	4,034
신평면 복운리	6	252	3,235
한우	6	252	3,235
신평면 봉교리	13	51,625	5,668
돼지	9	1,615	2,403
육계	2	50,000	2,310
한우	2	10	955
신평면 부수리	32	76,100	19,084
돼지	20	5,700	6,078
종계	12	70,400	13,006
신평면 영천리	10	30,096	3,366
육계	5	30,000	2,000
젓소	3	50	1,037
한우	2	46	329
신평면 운정리	13	1,712	4,390
돼지	4	1,500	1,112
한우	9	212	3,278
신평면 전대리	13	1,492	3,376
돼지	8	1,400	2,145
한우	5	92	1,231
신평면 초대리	44	11,742	17,272
돼지	25	11,500	10,663
젓소	5	104	2,539

한우	14	138	4,070
신평면 한정리	13	85,165	8,239
산양	1	9	30
육계	6	85,000	4,890
젓소	3	75	2,197
한우	3	81	1,122
용연동	33	667	6,833
한우	33	667	6,833
용연동 모평리	6	79	727
젓소	3	50	516
한우	3	29	211
우강면 부장리	4	51	781
한우	4	51	781
우강면 세류리	25	182,637	14,992
돼지	2	600	552
산란계	4	100,000	4,685
육계	6	60,000	3,030
종계	8	22,000	5,438
한우	5	37	1,287
우강면 소반리	13	5,000	2,889
돼지	13	5,000	2,889
우강면 신당리	2	6	158
한우	2	6	158
우강면 신송리	11	1,556	2,335
돼지	5	1,500	1,520
한우	6	56	815
우강면 신촌리	3	293	777
돼지	2	270	380
한우	1	23	397
우강면 신흥리	29	30,514	11,715
육계	3	30,000	1,548
육우	2	100	1,224
젓소	3	160	4,624
한우	21	254	4,319
우강면 원치리	13	242	3,786
젓소	10	208	3,189
한우	3	34	597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우두동	31	593	6,269
돼지	1	1	99
산양	1	3	15
육계	2	108	60
한우	27	481	6,095
우두동 용두리	24	131,621	15,064
육계	6	131,251	9,256
한우	18	370	5,808
우두동 진관리	114	234,151	47,479
돼지	25	9,110	14,730
육계	10	223,000	10,365
한우	79	2,041	22,384
원당동	1	8	28
돼지	1	8	28
원당동 매곡리	2	9	163
한우	2	9	163
정미면 대조리	9	150,005	7,395
산양	1	5	135
육계	8	150,000	7,260
정미면 덕마리	3	463	522
산란계	2	450	342
한우	1	13	180
정미면 덕삼리	8	258	3,751
젖소	4	190	2,508
한우	4	68	1,243
정미면 도산리	7	85	1,351
산양	1	15	64
염소	3	20	297
젖소	3	50	990
정미면 두산리	24	22,741	12,186
염소	1	11	12
젖소	7	200	2,576
종계	3	22,000	2,508
한우	13	530	7,090
정미면 마중리	16	17,384	11,020
젖소	9	263	7,307
종계	3	17,000	3,056

한우	4	121	657
정미면 매방리	14	25,137	3,995
사슴	1	20	580
산양	1	24	278
염소	2	60	102
육계	6	25,000	1,633
한우	4	33	1,402
정미면 봉생리	3	81	67
육계	2	80	39
한우	1	1	28
정미면 봉성리	34	442,549	19,206
돼지	8	2,200	2,044
산란계	3	420,000	10,410
육계	9	20,150	1,585
육우	2	50	2,882
한우	12	149	2,285
정미면 사관리	6	284	1,513
돼지	2	40	990
산란계	1	200	50
육계	1	21	15
한우	2	23	458
정미면 산성리	9	1,389	3,460
돼지	4	1,300	1,601
젖소	2	71	1,527
한우	3	18	332
정미면 송전리	32	42,630	18,135
육우	1	9	120
젖소	19	384	9,281
종계	4	42,000	5,683
한우	8	237	3,051
정미면 수당리	11	60,068	4,513
육계	5	60,000	3,232
한우	6	68	1,281
정미면 승산리	24	78,777	13,020
돼지	1	90	1,145
육계	3	45,000	2,112
종계	10	33,500	6,10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한우	10	187	3,658
정미면 신시리	9	142	1,933
한우	9	142	1,933
정미면 옥현리	70	242,627	34,202
돼지	18	15,500	12,796
산란계	3	25,000	1,452
염소	2	184	262
육계	18	201,200	11,266
한우	29	743	8,426
정미면 우산리	7	61	630
한우	7	61	630
정미면 장정리	14	59,002	7,664
돼지	10	4,000	4,744
육계	3	55,000	2,860
한우	1	2	60
정미면 천의리	9	40,174	3,540
염소	2	51	167
육계	1	40,000	2,243
한우	6	123	1,130
정미면 하성리	1	5	132
육우	1	5	132
정미면 향곡리	20	30,290	7,132
육계	3	30,000	2,400
한우	17	290	4,732
채운동	7	121	440
산양	3	25	99
육계	1	70	95
한우	3	26	246
합덕읍 광천리	29	43,071	18,315
돼지	7	2,400	2,672
육계	5	40,000	1,992
젖소	2	63	1,122
한우	15	608	12,529
합덕읍 나산리	70	10,316	25,836
돼지	29	9,500	9,092
염소	1	4	80
젖소	19	411	9,076



한우	21	401	7,588
합덕읍 내경리	10	1,205	2,414
돼지	6	1,000	1,410
사슴	1	7	15
산양	1	150	320
한우	2	48	669
합덕읍 대전리	18	250,120	13,071
산란계	3	200,000	3,290
종계	5	50,000	7,619
한우	10	120	2,162
합덕읍 대포리	2	40	529
한우	2	40	529
합덕읍 대합덕리	16	606	13,764
육우	3	10	1,112
젖소	13	596	12,652
합덕읍 도곡리	133	198,858	56,743
돼지	46	17,250	14,907
육계	31	180,000	12,121
육우	1	15	450
젖소	37	1,109	21,813
한우	18	484	7,452
합덕읍 문봉리	101	76,743	47,670
돼지	5	1,300	1,171
육계	3	52,000	2,700
육우	10	53	2,263
젖소	71	1,318	35,583
종계	4	22,000	4,170
한우	8	72	1,783
합덕읍 본리	41	97,050	20,128
돼지	20	7,330	7,724
육계	5	50,000	3,121
종계	4	39,600	6,480
한우	12	120	2,803
합덕읍 석우리	222	265,555	126,713
돼지	94	26,760	36,131
산란계	3	66,000	2,970
산양	1	3	50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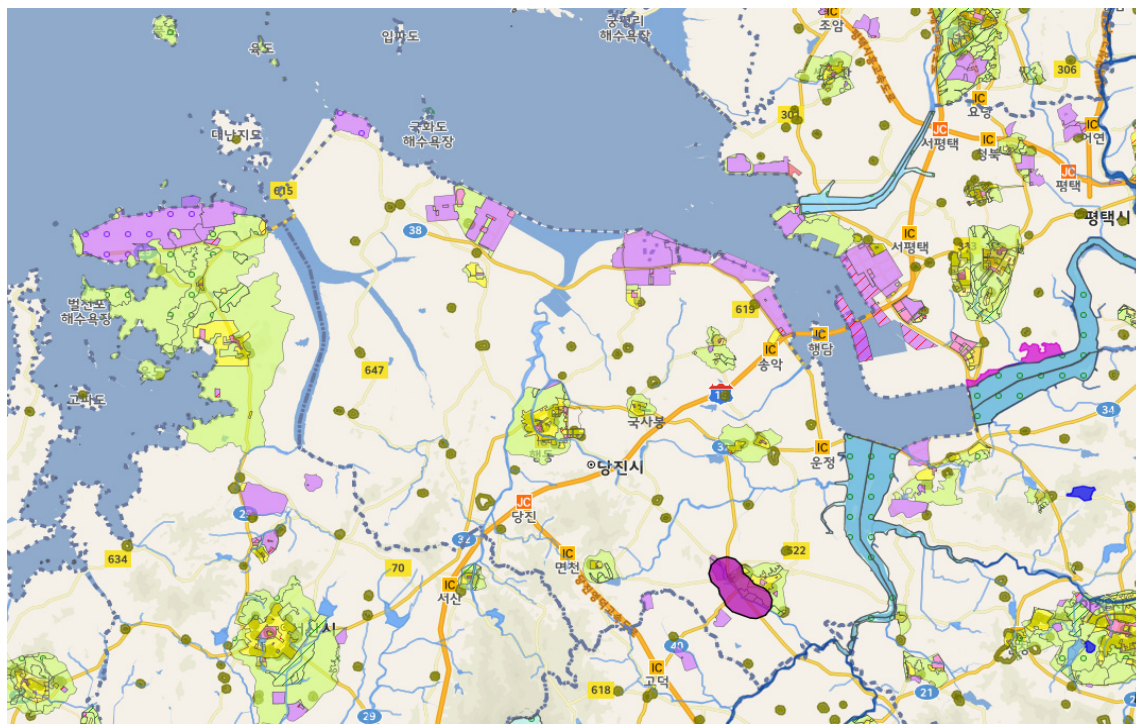
염소	1	150	141
육계	4	54,400	3,541
육우	3	118	1,825
젖소	60	1,974	48,502
종계	38	115,800	24,981
한우	18	350	8,572
합덕읍 성동리	24	110,250	8,313
산란계	10	70,000	4,655
산양	1	40	165
육계	5	40,060	2,037
한우	8	150	1,456
합덕읍 성원리	3	19	268
한우	3	19	268
합덕읍 소소리	106	172,125	48,732
돼지	51	15,800	19,370
산란계	3	155,000	2,850
육우	4	54	1,393
젖소	15	665	13,378
한우	33	606	11,741
합덕읍 송산리	45	3,012	12,088
돼지	10	2,200	2,584
사슴	2	14	354
육계	1	300	68
젖소	5	171	4,208
한우	27	327	4,874
합덕읍 신리	1	48,000	2,483
육계	1	48,000	2,483
합덕읍 신석리	13	2,559	3,138
돼지	7	2,500	2,372
한우	6	59	766
합덕읍 옥금리	3	155	1,066
육계	1	100	56
한우	2	55	1,010
합덕읍 운산리	6	1,536	1,390
꿩	1	1,000	300
돼지	2	500	550
사슴	1	2	49

한우	2	34	491
합덕읍 점원리	10	153	4,197
한우	10	153	4,197
합덕읍 중방리	95	10,988	30,494
돼지	40	9,650	13,859
육계	1	400	45
젓소	4	100	2,821
한우	50	838	13,769
합덕읍 창리	10	294	3,324
돼지	5	200	485
젓소	2	80	1,848
한우	3	14	991
합덕읍 합덕리	9	156	1,080
사슴	1	10	90
한우	8	146	990
행정동	18	1,321	3,356
돼지	5	1,200	1,583
사슴	1	5	90
한우	12	116	1,683
총합계	3,561	6,050,565	1,509,541



### 부록 3. 당진시 제한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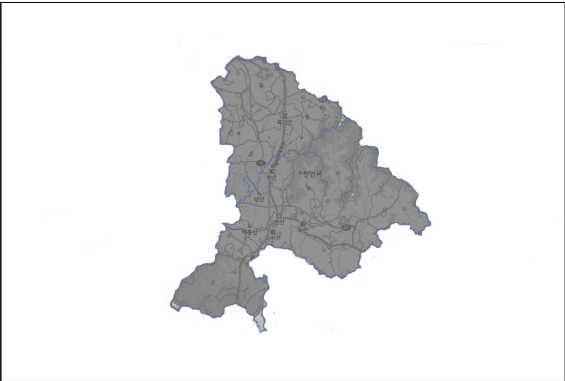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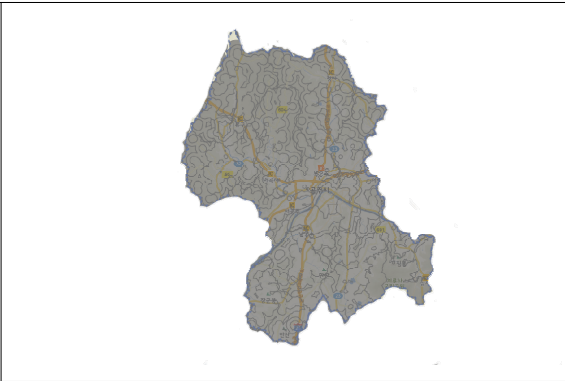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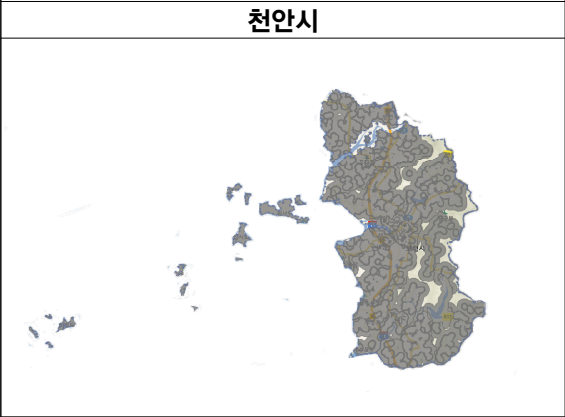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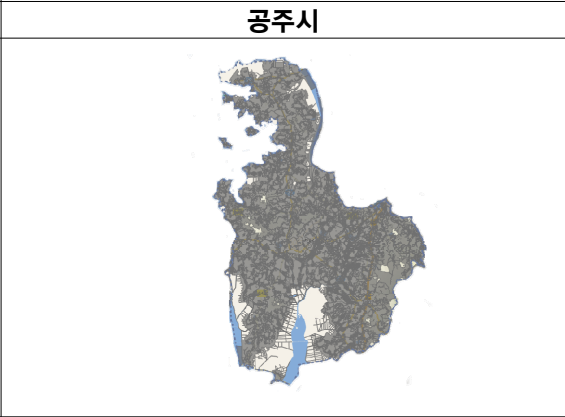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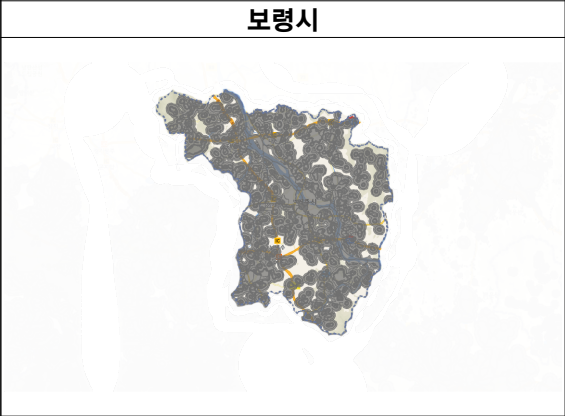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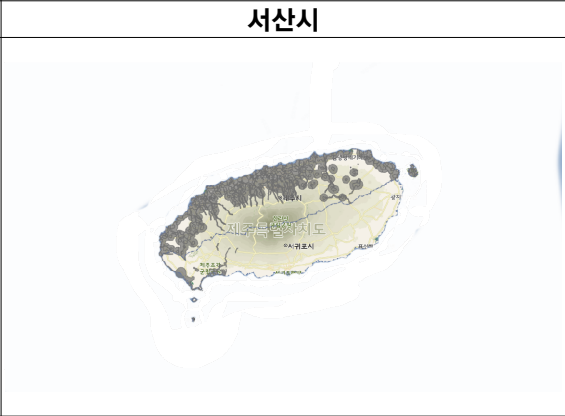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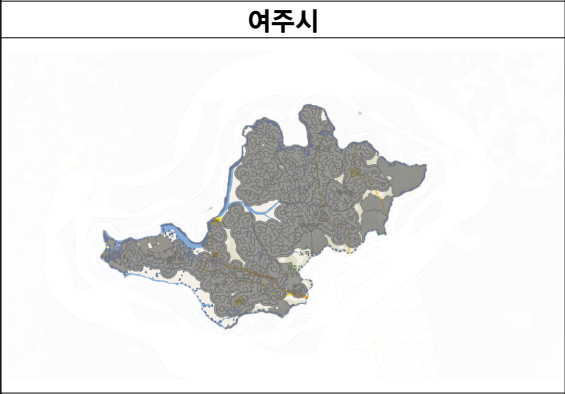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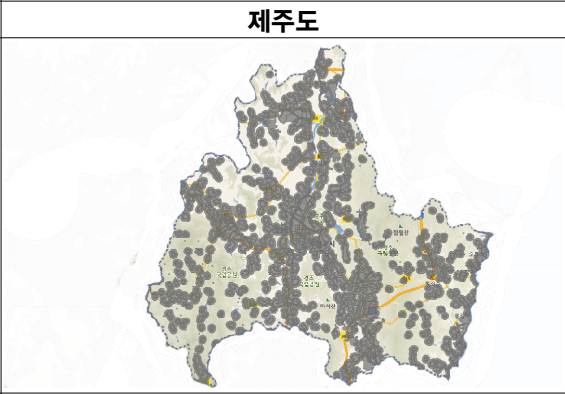
#### ■ 당진시 절대제한구역(도시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 부록 4.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여주시	제주도
	
영암군	경주시

## 부록 5.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 2012.01.01 조례 제 239호

(일부개정) 2015.12.15 조례 제505호

(일부개정) 2017.08.30 조례 제591호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08.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에 따른 젓소·오리·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개·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시설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사육”이란 식용 및 판매를 위해 키우는 동물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7.08.30.>
6. “주거밀집 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로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15.12.15.>
7. “담수호”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을 인공적으로 막아 담수한 호소로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를 말한다. <신설 2017.08.30.>
8. “담수호의 유입하천”이란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시점과 종점을 전부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17.08.30.>
  - 가. 삽교호 : 석우천·공포천·남원천·오봉천·거산천·신평천
  - 나. 석문호 : 백석천·역천·용연천·수당천·검암천·사기소천·삼웅천·시곡천·당진천
  - 다. 대호호 : 천의천·염술천·장정천·마중천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7.08.3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7.08.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법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3. 그 밖에 법 제11조 규정의 신고 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5.12.15.>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 및 대수선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 대수선헌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대화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08.30.>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처리시설을 증축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7.08.30.>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를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②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08.30.>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및 방치 금지
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유지
- 3.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는법 제53조(과태료) 및 규칙제17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가축

사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로 본다.

부칙<개정 2015.12.15. 조례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7.08.30.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제1항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 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	- 자연공원(국립, 도립, 시립공원)
	지하수법 제12조	-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8조	- 환경기준 초과지역, 특별대책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국가·지방) 경계로부터 300m
	수도법 제7조	-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제한구역	○ 기타 주거밀집 지역 중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형태의 5호(빈집 제외)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Ⅰ지역】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 : 300미터(m) 이내지역</li> <li>- 【Ⅱ지역】 젖소 : 400미터(m) 이내지역</li> <li>- 【Ⅲ지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미터(m) 이내지역</li> </ul>	

-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제한거리”란 주택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말한다.
3. 일부제한구역내 주거밀집 지역은 자연발생 마을 중 주택과 주택 간의 거리가 100미터(m) 이내로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4.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부록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0호, 2018.3.20., 일부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2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농협조합
  -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

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4.3.24.]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8.5.29.] 제5조

제6조 삭제 <2010.2.4.>

##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3.24.>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이 과다하거나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밀도를 「축산법」 제26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3.24.]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

[본조신설 2014.3.24.]

[제목개정 2015.12.1.]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4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14.3.24.]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

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4.3.24.]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본조신설 2014.3.24.]

####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 협의체(이하 "퇴비·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⑦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들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들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⑨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4.3.24.] 제31조제1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5.3.25.] 제32조

제33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营业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6조(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 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시공업자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전문개정 2014.3.24.]

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1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시공업자

②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문개정 2014.3.24.]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4.3.24.]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4.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9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4.3.24.] 제48조제1호·제6호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 제27조제5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4.3.24.] 제49조제2호·제4호·제5호·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9.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10. 제25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4.3.24.] 제50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4.3.24.] 제51조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시행일 : 2015.3.25.] 제51조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24.]

[2014.3.24. 법률 제12516호에 의하여 2010.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일 : 2014.3.24.]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 2015.3.25.] 제53조

[시행일 : 2017.1.1.] 제53조제3항제14호

부칙 <제15510호, 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7. 당진시 담당자 및 현장 면담

### I. 인터뷰 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
- 장소 : 당진시청, 당진시 송산면
- 대상자 : 당진시 축산과 담당자, 돼지 사육농가
- 인터뷰 주제 :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토의, 농가 인터뷰

### II. 인터뷰 결과

#### 1. 당진시 축산지원과 담당자

##### ■ 충남연구원

- 현재 전국 축종별 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례 정리 및 분석이 종료되었음. 분석결과 당진시의 경우 강력한 제한구역을 설정해 있는 상태임

##### ■ 당진시 담당자 A씨

- 제한구역이 2017년 설정된 이후 20여건이 신규로 신청되었으나 모두 반려된 상태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인들이었으며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지인들에 대한 제한은 유지가 되어야 하나 오히려 현재 축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새로운 제한구역 안이 도출되었으면 함

##### ■ 당진시 담당자 B씨

- 실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화학비료가 축산분뇨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나 오히려 축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현재 축산업에 대하여 승인요청이 대호만 인근의 인가가 드문 지역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임

##### ■ 충남연구원

-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함

##### ■ 당진시 담당자 B씨

- 현재 민원이 상습적으로 접수되는 농가는 주로 고대, 신평, 합덕 일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 지역은 당진시에서도 축산업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래된 축사가 배치되어 있음



-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축종은 돼지로 한우나 젓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태임
- 충남연구원
  - 당진시에서는 돼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축종을 사육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축종은 무엇인지
- 당진시 담당자 A씨
  - 당진시의 경우 돼지를 비롯하여 젓소도 사육두수가 많은 편으로 충남도 내에서도 사육두수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 충남연구원
  - 돼지 만큼의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닭 또한 많이 발생하는 축종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 당진시의 양계 사육현황은 어떠한지
- 당진시 담당자 B씨
  - 우리 시에서 사육되는 양계의 종류는 주로 육계로 한 사육장에서 사육이 1년에 5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당진시 담당자 A씨
  - 현재 제한구역의 문제점은 축종별 제한한 거리도 문제지만 일반 개천에서 좌우로 각 300m씩 설정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이 때문에 당진시의 거의 모든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었음
  - 가장 축산악취 문제가 없는 한우조차도 개천에 의한 축산구역 제한으로 현재 기존의 축사를 옮길 수 없는 실정임
- 충남연구원
  - 민원의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 축사의 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함
- 당진시 담당자 B씨
  - 사실상 시민들은 축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현대화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충남연구원
  - 주민합의의 경우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인 이해로 상생을 위한 합의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대규모 축산업 종사자들에 의한 자본을 활용하여 합의가 아닌 매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여야 함
- 당진시 담당자 A씨
  - 기존의 관내에서 축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전과 신축, 현대화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안에 제시되었으면 함

■ 충남연구원

- 그로 인한 예외 규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둘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음
- 조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돼지의 경우 무창형과 개방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당진시 담당자 A씨

- 무창형 돈사가 시설현대화가 된 돈사로 당진시에서도 시설현대화를 무창형 축사 방향을 시행하고 있음
- 이번 연구에서 지천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거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주민합의를 포함할지, 기존의 주민들의 축사를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 연구되었으면 함

2.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충남연구원

- 현재 당진시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과도하여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사육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시행하고자 함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이미 시의원, 도의원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설정해 놓은 제한구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됨
- 너무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인하여 현재 이전만이 아닌 증축, 개축 등 축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허가가 불가한 상태임

■ 충남연구원

- 2017년 조례의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음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개정 전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으나 일부 지역이 가능했기에 타도에서도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음. 하지만 지금은 타도에서 넘어오든 살고 있던 주민이든 모든 경우가 불가한 상태임
- 현재 축사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 환경영향성 평가, 면개발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상태임

■ 충남연구원

- 조례에 의하면 현대화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승인해 주고 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조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축사와 관련된 행위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하는 순간 당진시의 축산업은 없어질 것임

■ 충남연구원

- 대호만 일원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지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산업은 물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대호만 일원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일부 농장주가 옮기고자 하였으나 포기하였음

■ 충남연구원

- 돼지 축사가 많은 지역이 어디이며 민원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당진시 내에 신평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지역은 당진에서도 가장 먼저 돼지사육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각종 축산업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함
-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에는 당진시 어디에서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함

■ 충남연구원

- 민원 문제는 결국 악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 현대화를 시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현대화가 된다면 악취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지만, 이것조차도 축사에 대한 행위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충남연구원

- 대호지면이나 정미면 쪽에는 민가가 적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제한구역을 완화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전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어떠한 농가가 이전할 것인지 의문으로 실효성은 없을 것임
- 만약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이전비를 최소화 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함

■ 충남연구원

- 제주도의 경우 축산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한보다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를 당진시에 적용해 보면 어떨지

■ 돼지 사육농장주 C씨

- 축산농가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실수에 대해 너무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축산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연구 책임

---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내부 연구진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돈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승석 충남연구원 연구원

이도경 충남연구원 연구원

## 외부 연구진

---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

인 쇄	2020년 05월 29일
발 행	2020년 05월 29일
발행인	윤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전 화	041-840-1114
팩 스	041-840-1199
제 작	화랑기획인쇄

---

※ 이 책의 저작권은 당진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책에 수록된 내용 및 사진은 당진시의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 복사 전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입니다.



